현안연구 2018-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Introduction of Marine Recreation and Welfare Service through Promoting Coastal Wellness Industry

2019. 4.

홍장원 | 윤인주 | 최일선 | 이정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홍장원 연구총괄, 제1장, 제4장 제1절, 제3절

연구진

윤인주 제3장
최일선 제2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4절
이정아 제2장 제2절 일부, 제3절, 제4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강성진 경남대학교 교수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목적 ·····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5
2. 연구 방법 ·····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6

제 2 장 국내외 해양치유정책 동향 분석 · 9

제1절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9
1. 세계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9
2. 국내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13
제2절 국외 해양치유정책과 이용사례 분석 ····· 18
1. 프랑스 해양치유정책 ····· 18
2. 독일 해양치유정책 ····· 23
3. 일본 해양치유정책 ····· 28
제3절 국내 치유 및 복지정책 동향 ····· 31
1. 산림치유·복지정책 ····· 31
2. 해양치유·복지정책 ····· 38
제4절 시사점 ····· 49

제 3 장 국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인식조사 • 51
제1절 조사 개요 ····· 51
1. 조사 목적 ····· 51
2. 조사 방법 ····· 52
3. 응답자 특성 ····· 53
제2절 조사 결과 ····· 54
1.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 ····· 54
2.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관한 인식 ····· 67
제3절 시사점 ····· 74
1.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 ····· 74
2.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76

제 4 장 정책 방향 설정 및 제언 • 79
제1절 기본방향 ····· 79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80
1. 정책 과제의 설정 ····· 80
2. 정책 추진과제 ····· 81
3. 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 ····· 8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 91
1. 결론 ····· 91
2. 정책적 제언 ····· 93

❖ 참고문헌 • 95

❖ 부록 • 101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 7
〈표 2-1〉 지역별 치유-웰니스 산업 규모 ····· 11
〈표 2-2〉 지역별 웰니스 관광시장 이용 및 지불 규모 ····· 12
〈표 2-3〉 나라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 ····· 13
〈표 2-4〉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웰니스 관광 25선 + 2018년 신규 선정 8선 ····· 15
〈표 2-5〉 탈라소테라피의 역사 ····· 19
〈표 2-6〉 프랑스 해양요법 센터 대표 프로그램 및 요법 ····· 22
〈표 2-7〉 독일 쿠어오르트 이용자 현황(2007~2016년) ····· 24
〈표 2-8〉 독일 쿠어오르트 유형별 인증 요건 ····· 26
〈표 2-9〉 독일 해양치유 시설 인증 요건 ····· 28
〈표 2-10〉 산림복지 종합계획(2013~2017)의 세부 내용 ····· 34
〈표 2-11〉 산림복지 진흥계획(2015~2022)의 세부 내용 ····· 35
〈표 2-12〉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 ····· 37
〈표 2-13〉「농어업인 삶의 질 법」 중 농어업인 복지 관련 조문 ····· 40
〈표 2-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의 세부 내용(일부) ····· 43
〈표 2-15〉 해양수산부 제3차 삶의 질 향상 추진과제 현황 ····· 46
〈표 3-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국민인식조사 방법 ····· 52
〈표 3-2〉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 53
〈표 3-3〉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연령별) ····· 62
〈표 3-4〉 해양치유 도입방식(연령별) ····· 64
〈표 3-5〉 해양치유 도입 시 필요 프로그램(연령별) ····· 65
〈표 4-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인식 제고 ····· 84

〈표 4-2〉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프로그램 마련 ····· 86
〈표 4-3〉 해양치유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 88
〈표 4-4〉 해양치유법(가칭) 구성 및 주요 내용 ····· 90
〈표 4-5〉 해양치유정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안 ····· 93

그림 목차

〈그림 2-1〉 세계 웰니스 산업 규모 ····· 10
〈그림 2-2〉 국내 웰니스 산업 구분 ····· 14
〈그림 2-3〉 서귀포 치유의 숲 ····· 16
〈그림 2-4〉 진안 홍삼스파 ····· 17
〈그림 2-5〉 프랑스 탈라소 인증 해양요법 센터 분포도 ····· 20
〈그림 2-6〉 탈라주르 센터 분포도 및 시설 사례 ····· 21
〈그림 2-7〉 독일 쿠어오르트 분포 현황 ····· 25
〈그림 2-8〉 독일 해양치유 시설 사례 ····· 28
〈그림 2-9〉 일본 해양치유 시설 분포 현황 및 시설 전경 ····· 29
〈그림 2-10〉 국내 관광여행 주요 활동과 만성질환자 증가 추이 ····· 32
〈그림 2-11〉 산림복지 관련 법률 구축과정 ····· 33
〈그림 2-12〉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자체 선정 지역 ····· 48
〈그림 3-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국민인식조사 목적 ····· 52
〈그림 3-2〉 향후 바다 이용방법 중 주목 받을 부분 ····· 54
〈그림 3-3〉 바닷가 방문에 대한 전망 ····· 55
〈그림 3-4〉 해양치유 체험 의향 ····· 56
〈그림 3-5〉 해양치유 경험 희망 이유 ····· 57
〈그림 3-6〉 해양치유 비경험 희망 이유 ····· 57
〈그림 3-7〉 해양치유 참여 시 중요 고려 요소(1) ····· 58
〈그림 3-8〉 해양치유 참여 시 중요 고려 요소(2) ····· 59
〈그림 3-9〉 해양치유 공간 조성 희망 지역 ····· 59
〈그림 3-10〉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기대 정도(1) ····· 60
〈그림 3-11〉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기대 정도(2) ····· 60

〈그림 3-12〉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1) ····· 61
〈그림 3-13〉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2) ····· 61
〈그림 3-14〉 해양자원 활용 치유인증 제품 구매 의향 ····· 63
〈그림 3-15〉 해양치유 도입 방식 ····· 64
〈그림 3-16〉 해양치유 도입 시 필요 프로그램 ····· 65
〈그림 3-17〉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1) ····· 66
〈그림 3-18〉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2) ····· 66
〈그림 3-19〉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전문 직업에 대한 의견 ····· 67
〈그림 3-20〉 평소 바닷가 방문 빈도 ····· 68
〈그림 3-21〉 바닷가 방문 이유 ····· 68
〈그림 3-22〉 바닷가 방문의 제약 요인 ····· 69
〈그림 3-23〉 바닷가 방문 시 참여하는 휴양 활동 ····· 70
〈그림 3-24〉 향후 희망 휴양 활동 ····· 70
〈그림 3-25〉 바다 휴양활동 만족도(1) ····· 71
〈그림 3-26〉 바다 휴양활동 만족도(2) ····· 71
〈그림 3-27〉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필요도 ····· 72
〈그림 3-28〉 향후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이용 의향 ····· 72
〈그림 3-29〉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필요 대상 ····· 73
〈그림 3-30〉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우선 시행 정책 ····· 74
〈그림 4-1〉 해양치유정책 과제 도출 ····· 81
〈그림 4-2〉 산림치유·복지정책 및 관련 서비스 홍보 사례 ····· 84
〈그림 4-3〉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공급 유형 ····· 86
〈그림 4-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서비스 공급체계 ····· 87
〈그림 4-5〉 「산림휴양법」과 「산림복지법」 도입 배경 분석 ····· 89

요약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최근 들어 가장 큰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하나로, 휴식이 있는 삶과 소비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지역 휴양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자연자원과 지역환경을 국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려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산림치유정책과 산림복지정책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해양 부문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휴양 및 치유,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2.2%는 바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74.1%는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가를 찾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휴식과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 및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은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 테마로 하는 웰니

스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 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국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양치유를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한다.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도 해양치유를 보완대체요법으로 인정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해양치유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휴양 및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책은 산림 부문에 비해 최근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양 부문 복지정책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 수요 증가로 향후 정책 방향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10월부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국민 휴양 및 복지 증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미 4개의 협력 지자체를 선정했다. 해양휴양·복지와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조사(2018년 8월 2~9일, 557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82.9%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 및 복지서비스 정책 추진 방향은 1)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 확산을 바탕으로 한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공간 조성, 2)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3) 해양치유정책 추진 기반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해

양치유정책 도입을 위해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및 공감대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 연안 지역의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치유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관광산업, 휴식을 바탕으로 한 웰니스 시장 급성장

■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은 2020년에 8,080억 달러로 연 7% 성장 예상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 문화의 성장 등으로 이와 연계한 웰니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세계 웰니스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3.7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중요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 웰니스 산업 중 웰니스 관광시장은 세 번째로 큰 분야로 20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이며 2020년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향후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시장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할 전망

■ 국내 웰니스 관광시장은 한방, 뷰티, 스파, 산림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 웰니스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웰니스 관광지 25선을 선정하여 홍보 및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8곳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재 33개소의 국가 선정 웰니스 관광시설이 운영 중임
- 2017년 웰니스 관광 25선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은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대비 13% 상승한 수치

- 선정된 관광지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여행상품 개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
- 2018년에는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선정·육성할 예정이며, 이 중 통영, 거제, 고성을 중심으로 해양 웰니스 관광을 육성할 계획

세계 각국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

■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

- 프랑스 내 해양요법 시설은 83개이며 매년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음
  - 랑그독-루시용, 아키텐, 라 볼 지역 등은 해양 리조트 및 대중관광지로 개발됨
- 프랑스 해안의 해양치유는 지리와 기후의 차이로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 프랑스 해양요법 센터는 민간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의 품질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음
  - 현재 프랑스 전역에 프랑스 탈라소로부터 인증을 받은 해양요법 센터는 37개소임

■ 독일은 해양치유를 질병예방 및 건강회복 등 복지정책 수단으로 활용

- 독일은 연안 지역에 위치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Kurort, 치유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 350개소 이상의 쿠어오르트 중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는 32개소 이상임
  - 해양치유 쿠어오르트 이용자는 35.4%로 2번째로 많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이용자 증가율이 가장 높음
- 독일은 해양치유의 질병예방 및 재활 효과를 인정하고 사회보험으로 이용료를 보전하고 있음
- 독일해양치유협의회는 해양치유 시설 인증, 관리·운영 규정 설정을 담당하며 시설 입지, 인프라, 자원 등을 기준으로 시설을 9개 범주로 구분·인증함

■ 일본,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수단으로 해양치유를 활용

-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도입됨
  - 초기에는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자연환경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랑스식 해양요법 시설 도입
  - 일본의 해양치유 관련 시설은 26개소가 운영 중임
-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및 재활, 개호(介護) 예방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 활용
  - 해양치유를 지역의 노인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증진, 회복, 치유,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도입·활용
- 일본은 해양치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지역 대학 및 해양치유시설 종사자 등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함

우리나라에서 해양 치유정책은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

■ 산림청은 2000년대부터 산림자원을 활용한 복지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국내 산림복지정책은 「산림기본법(20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5)」을 통해 체계화됨
  -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산림복지·치유의 개념을 확립하고, 산림치유 공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복지 종합계획'(2013~2017)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산림복지정책이 통합되었으며, '산림복지 진흥계획(2018~2022)'으로 정책 집행력이 제고됨
  - 산림복지정책은 복지서비스 대상의 확장 및 지역 균형 발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산림복지정책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와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함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로 수혜 대상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추진함
  -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가로수, 정원 등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치유 및 국민 휴양·복지서비스 정책 마련 착수

- 산림 부문에 비해 휴양 및 치유, 복지 개념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농어업인 복지 관련 정책 중 관련 내용은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농어업인 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간접적으로 치유의 개념이 가미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 사업으로의 연결성은 낮았음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은 법률의 복지·치유 개념을 반영해 구체적인 농어업인 복지정책을 도출함
- 해양 부문의 치유 및 휴양·복지정책은 농촌 및 농업인과 함께 묶여 다루어지면서 해양 부문만의 특징 및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함
- 정책 대상이 어촌, 어업인의 경제·정주여건 개선에 한정되며,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국민 휴양·복지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은 비교적 최근 시작됨
  -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4개 협력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현재 정부의 해양치유정책은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산업 도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치유산업 도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이용 의사는 거의 절대적

■ 해양수산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이용 의향에 긍정적

- 19세 이상 국민 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국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해양수산 분야 정책 우선순위가 환경과 안전에 있다고 보며, 다음으로 해양치유 활성화와 소외계층 해양휴양·복지 사업을 높이 평가함
  -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중독 방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91.6%로,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특정 해양자원의 효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바다 경관, 즉 바다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높이 평가함
- 응답자들은 해양치유를 통해 질병 치료보다 건강 증진을 기대함
  -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 서비스 이용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시함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며, 관련 인력 양성 시 기존 직업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해양치유정책 추진 및 산업화를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공간 조성,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치유·웰니스 시장의 성장, 삶의 질 개선,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치유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구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는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마련, 해양치유 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해양치유정책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의 도입·추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에 해양치유 효능 관련 연구 결과 자료 제공, 해양치유 체험행사 추진, 해양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일반인, 학계, 산업계가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발굴을 통하여 해양치유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리센터 조성·지정 및 지역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 인프라의 운영을 위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추진하도록 함
- 해양치유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치유법」(가칭)을 제정하고, 해양치유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해양치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을 활용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내 연안 공간은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항만 및 물류시설, 산업단지, 수산업 활동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해양을 관광 및 휴식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휴식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및 소비 트렌드의 부상과 더불어 지역 휴양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정책이 강조되면서 자연자원 및 지역환경을 활용한 단순한 휴식공간 조성에서 벗어나 이를 국민 휴양기회 제공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려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과거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등 복지 소외자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현대 복지정책은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해양 부문에서 복지는 어업인 복지, 어촌 복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에게 해양은 휴식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관광활동 공간 정도로만 활용되어 왔다. 변화된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국민 행복실현을 위해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연 및 환경자원을 치유 및 국민 휴양과 연계한 복지정책은 산림 부문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산림 부문은 산림치유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산림기본법(2001. 5 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 8 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015. 12 제정)」을 제정하면서 산림치유자원을 토대로 산림휴양에서 산림복지로 정책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산림치유원 등 산림치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 부문에 비해 해양 부문에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 및 휴양, 국민복지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해양 부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해양 부문과 농업 부문이 공동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해양 부문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마련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최근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민휴양복지의 정책적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홍장원 외(2017)는 여가권(right to leisure)과 휴양권(right to recreation)에 대한 검토를 통해 휴양복지의 개념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연에서 휴양할 수 있는 동일한 휴양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휴양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복지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1] 아울러

해양휴양복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해양공간에서 휴양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2] 해양을 통한 국민휴양 및 치유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더불어 산림에서의 치유서비스와 복지정책 도입환경을 고려할 때,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은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R&D)을 통해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2017~2019년)'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를 통해 해양치유자원 조사 및 DB 구축, 해양치유 연구 협력 지자체(4개소) 선정 및 협력 방안 마련, 해양치유 산업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와 국내외 관광 트렌드를 고려하여 해양치유산업 도입을 통해 어업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해양을 통한 휴양복지·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3] 국민의 92.2%가 '해양은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74.1%가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바닷가를 찾는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휴식과 휴양을 위해 바닷가를 방문하는 비율이 높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 및 해양치유자

1) 홍장원 외,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 13.
2) 홍장원 외,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 74.
3)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제80호, 2018.4. p.2.

원을 활용하여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연안어촌 지역의 자연자원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산으로 이용해 지역소득 및 복지증진 기회로 활용한다면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민복지 영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촌지역 공공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식이 있는 삶 확산과 함께 세계적인 치유, 휴양산업 트렌드 변화와 연계하여 해양을 통한 휴양·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여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발전 방향 설정 및 정책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휴양 트렌드 변화와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해양치유정책 도입 방향 설정과 함께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치유정책 동향 및 이용사례 분석과 국민의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해양치유정책 도입 방향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검토 및 중장기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18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며,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양치유 R&D 사업의 해양치유자원 조사 범위를 공간적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국내외 치유정책 관련 선행연구와 더불어 이용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정책의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우선 2장에서는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바탕으로 국내외 치유 시장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해양치유 관련 정책 및 이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림 부문의 치유자원 활용 및 휴양공간 조성, 산림복지정책 등을 분석하여 해양 부문에 활용 가능한 요소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양치유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치유정책 및 관련 사례 분석,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정책의 도입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해양치유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치유 및 휴양·복지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 수요자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에서는 웰니스 산업 및 시장동향, 치유

관련 국내외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림 분야의 치유 및 복지정책 사례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산림치유 서비스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치유 및 해양치유산업의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국내 해양치유 및 이를 활용한 휴양·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유와 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산림 부문의 치유, 휴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정희 외(2013)는 산림치유 동향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산림치유의 효과 검증 및 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리화 외(2014)는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하여 자연치유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산림치유정책 및 연구개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휴양복지와 관련해서 홍장원 외(2017)는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립한 개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를 활용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산림치유 동향과 발전 방안 • 연구자(년도): 이정희 외2013) • 연구목적: 산림치유 도입 배경 및 효과 검증, 공간 조성, 운영 시스템 검토를 바탕으로 발전 방안 도출	• 문헌연구, 사례분석	• 국내외 산림치유 현황 분석 • 국내외 산림치유 효과 평가 연구 분석 • 국내외 산림치유 공간 조성 및 운영 시스템 비교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 과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종합계획 • 연구자(년도):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2017) • 연구목적: 제주지역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산림휴양 활성화 계획 수립	• 문헌연구,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조사 • 현장실사 • 산림휴양시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제주지역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 산림휴양의 개념 정립 • 산림휴양 관련 정책 현황 및 제주지역 산림휴양자원 실태 분석 • 국내외 산림휴양 사례 분석 • 산림휴양시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3	• 과제명: 자연치유 관련 동향 및 산림치유 시사점 • 연구자(년도): 유리화 외(2014) • 연구목적: 자연치유 개념 및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문헌연구, 사례분석	• 자연치유 관련 용어 개념 정의 • 자연치유의 기술적 분류체계 분석 • 국내외 자연치유 동향 분석 • 산림치유정책 및 연구개발 관련 시사점 도출
	4	• 과제명: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홍장원 외(2017) • 연구목적: 해양휴양복지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분석을 통해 해양휴양 및 복지정책 추진의 시사점 도출	• 문헌연구, 사례분석	• 휴양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 국내 해양휴양관광 실태분석 • 국외 해양휴양복지 사례분석 • 해양휴양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		• 기존 연구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정책 수립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강조점이 있음 • 기존 연구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발전과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문헌연구,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조사 • 주무부처 및 지자체 협의	•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해양치유정책의 도입여건 분석, R&D 사업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도출

제 2 장

국내외 해양치유정책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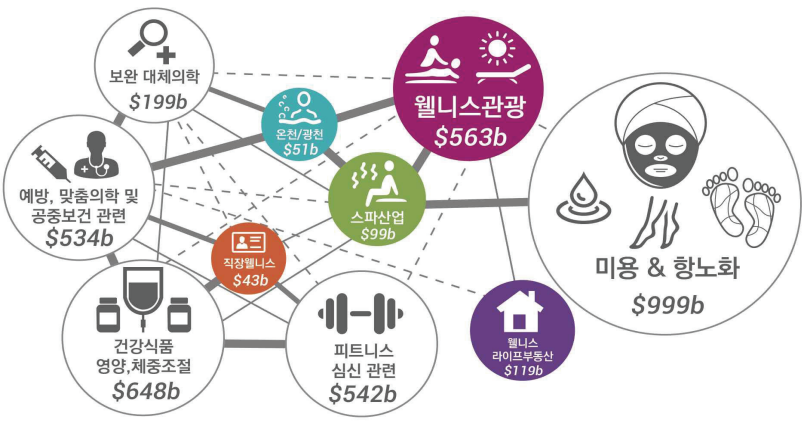
제1절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

1. 세계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담, 자연을 활용한 치유·휴양 문화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웰니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웰니스란 최고 상태의 웰빙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개인의 활동, 선택, 라이프스타일 등을 포함한다(세계 웰니스 연구소, 2017).[5] 2015년 기준 세계 웰니스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3.7조 달러(한화 약 4천조 원)로 전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중요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세계 웰니스 연구소, 2017).

5) 세계 웰니스 연구소,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17. 1, p. 3.

〈그림 2-1〉 세계 웰니스 산업 규모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2017. 1),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p. 3 재구성

특히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웰니스 시장 성장률이 10.6%를 기록해 동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이 3.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분석된다(세계 웰니스 연구소, 2017). 세계 웰니스 시장별 규모를 살펴보면 미용 및 항노화 산업이 9,99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건강식품, 영양 및 체중조절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웰니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스파산업은 유럽이 발달되어 있으며, 웰니스 관광산업은 북미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온천/광천 산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규모가 가장 크며, 직장 웰니스 산업과 웰니스 부동산 산업은 북미 지역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웰니스 산업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지역별 치유-웰니스 산업 규모

(단위: 억 달러)

지역	스파산업	웰니스 관광산업	온천/광천 산업	직장 웰니스 산업	웰니스 부동산 산업
아시아-태평양	214	1,112	292	84	407
유럽	275	1,934	197	161	290
북미	206	2,157	60	162	479
라틴-캐리비언	49	304	12	12	4
중동아시아-북아프리카	21	83	2	11	5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2017. 1),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재구성

한편 웰니스 산업 중에서도 웰니스 관광시장은 세 번째로 큰 분야이다. 2015년 기준 5,630억 달러 규모로 2020년까지 연 7.5% 성장하여 약 8,080억 달러 규모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세계 웰니스 연구소, 2017). 웰니스 관광이란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6] 웰니스 관광시장의 지역별 이용 및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지출 규모 기준으로는 북미 지역이 2,157억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횟수 기준으로는 유럽 지역이 2억 4,990만 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증감률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출 규모가 2015년에 2013년과 비교하여 32.2% 증가하며 가장 빨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횟수 기준으로는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시장이 31.8%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별 웰니스 관광 목적지를 살펴보면 미국이 여행횟수 기준으로

6) 문화체육관광부,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모델 개발 연구」. 2014. 2, p. 37.

는 1억 6,120만 회, 지출 규모로는 2,022억 달러로 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 웰니스 관광 목적지에서 16위를 기록하며 68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나타났다. 한편 웰니스 관광객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여행횟수 기준으로 약 1,800만 회로 나타나 이 시기 증감률이 26.6%로 가장 많은 웰니스 관광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 독일,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웰니스 관광객 규모 11위로 여행횟수 기준 240만 회를 보였다.

〈표 2-2〉 지역별 웰니스 관광시장 이용 및 지불 규모

(단위: 백만 회, 억 달러, %)

지역	여행횟수			지출 규모		
	2013	2015	증감률	2013	2015	증감률
북미	171.7	186.5	8.6	1,955	2,157	10.3
유럽	216.2	249.9	15.6	1,781	1,934	8.6
아시아-태평양	151.9	193.9	27.6	841	1,112	32.2
라틴아메리카-캐리비언	35.5	46.8	31.8	259	304	17.4
중동-북아프리카	7.0	8.5	21.4	73	83	15.3
아프리카	4.2	5.4	28.6	32	42	31.2
총 웰니스 관광시장	586.5	691.0	17.8	4,941	5,632	14.0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2017. 1),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p. 21 재구성

지역별 웰니스 산업 규모와 나라별 웰니스 관광시장을 분석한 결과 향후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시장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나라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

(단위: 백만 회, 억 달러, %)

웰니스 관광 목적지(2015년)				웰니스 관광객 국가(2013~2015년)			
순위	국가	여행횟수	지출 규모	순위	국가	여행횟수	증감률
1	미국	161.2	2,022	1	중국	18.1	26.6
2	독일	58.5	602	2	미국	12.6	4.1%
3	프랑스	30.6	302	3	독일	8.3	7.9%
4	중국	48.2	295	4	인도	6.0	8.8%
5	일본	37.8	198	5	프랑스	4.9	9.0%
6	오스트리아	14.6	154	6	호주	4.0	36.7%
7	캐나다	25.3	135	7	멕시코	3.3	13.0%
8	영국	20.6	130	8	러시아	3.2	14.4%
9	이탈리아	6.6	127	9	브라질	2.7	21.0%
10	멕시코	15.3	126	10	오스트리아	2.6	10.0%
16	한국	18.0	68	11	한국	2.4	7.3%

자료: 세계 웰니스 연구소(2017. 1),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pp. 22-23 재구성

2. 국내 웰니스 시장 동향 및 전망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2)[7]에 따르면 국내 웰니스 산업은 지향가치에 따라서 3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셀프케어, 리빙케어,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부문이다. 셀프케어 부문은 생활건강, 피트니스·체력관리, 웰에이징 등의 분야로 신체와 정신, 외모를 중심으로 웰니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다. 리빙케어 부문은 웰빙웨어, 웰빙 인테리어, 웰니스 생활환경관리 분야 등으로 웰니스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용품이나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휴양레저, 스포테인먼트, 감성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로 관광, 스포츠, 여가활동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다.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2012.

〈그림 2-2〉 국내 웰니스 산업 구분

자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2),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p. 25

웰니스 산업 각 부문의 규모를 살펴보면 셀프케어 시장이 약 28조 4,834억 원, 리빙케어 시장이 32조 5,813억 원,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14조 9,155억 원으로 추정되어 국내 웰니스 시장 총 규모는 약 75조 9,802억 원이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2). 특히 국내 웰니스 산업은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인 흐름에 맞추어 웰니스 산업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웰니스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7년 웰니스 관광지 25선을 선정하여 홍보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8] 국내 웰니스 관광은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 치유로 4개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관광지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여행상품 개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용태세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웰니스

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2017. 5. 24.

관광 지원에 대한 정책 배경은 기존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료관광 영역을 넘어 건강과 힐링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표 2-4〉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웰니스 관광 25선 + 2018년 신규 선정 8선

테마	지역	시설	테마	지역	시설
한방	서울	약다방봄동	뷰티·스파	서울	올리바인 스파
		여용국 한방스파			정관장 스파 G
		티테라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 스파
	대구	하늘호수		부산	스파랜드 센텀시티
	경남	산청동의보감촌		대구	리조트 스파밸리
힐링·명상	강원	힐리언스 선마을		인천	청라 스파렉스
		(신규)파크로쉬 리조트 & 웰니스			
	충북	깊은산속옹달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광주	편백나라효소궁
	제주	WE 호텔 웰니스 센터		경기	편백숲힐링토피아
	서울	(신규)비스타 워커힐 웰니스 클럽			허브아일랜드 허브힐링센터
자연·숲치유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신규)아쿠아필드 고양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충북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 힐링스파
	경북	국립산림치유원		전북	진안홍삼스파
					스파라쿠아 전주온천
	제주	제주허브동산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신규)서귀포 치유의 숲			
	강원	(신규)동해무릉건강숲			(신규)한화리조트 스파테라피센터
	충남	(신규)팜카밀레		전남	(신규)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주: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7년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2018년 8곳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재 33개소의 국가 선정 웰니스 관광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5. 24), 보도자료,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한국관광공사(2018. 7. 24), 보도자료, 「웰니스 관광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이끈다」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 중 대표적인 곳인 서귀포 치유의 숲은 2016년 개장하였으며, 국유림에 조성된 숲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하고 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300명, 주말에는 6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총 11km의 길이로 만들어진 치유의 숲은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0개의 테마 길로 조성되어 있다.[9] 입구의 방문자 센터를 시작으로 각각의 테마 길에는 숲속 쉼터를 마련하여 산림치유 인자인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소리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1800년대의 집터, 숯가마터, 옛길 등이 보존되어 있어 생태환경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매력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3〉 서귀포 치유의 숲

자료: 비짓제주(검색일: 2018. 8. 22)

다음으로 전북 진안의 홍삼스파는 한방 스파의 형태로 한국고려홍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파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 태극존, 테라피존, 아쿠아존으로 구분하여 홍삼버블센스 테라피, 허브 테라피, 스톤 테라피,

9) 생명의숲(검색일: 2018. 8. 22); 비짓제주(검색일: 2018. 8. 22).

명상을 할 수 있는 하늘정원 등이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건강과 휴식을 추구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요금은 30,000원에서 43,000원 정도이고 1회 체험정원은 300명 내외이며 1일 숙박정원은 80명 내외이다.[10)]

〈그림 2-4〉 진안 홍삼스파

자료: 진안 홍삼스파(검색일: 2018. 8. 22)

2017년 웰니스 관광 25선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은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과 비교하여 약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1)] 2018년에는 기존 25개의 웰니스 관광시설과 더불어 국내외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8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였다.[12)]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을 중심으로 한방 항노화 웰니스 관광을 발전시킬 계획이며, 통영,

10) 진안 홍삼스파(검색일: 2018. 8. 22) 참고해서 정리.
1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지역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2018. 5. 8.
12)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웰니스 관광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이끈다」, 2018.7. 24.

거제, 고성을 중심으로는 해양 웰니스 관광을 육성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제2절 국외 해양치유정책과 이용사례 분석

1. 프랑스 해양치유정책

프랑스에서는 해변가에 위치한 관광단지나 호텔 등에서 시행되는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 해양요법, 해양치유)가 각광받고 있다. 탈라소테라피는 예방 및 치료적 목적으로 해양의 유익한 성분인 해양기후, 해수, 해양진흙, 해조류, 모래 및 기타 해양 추출물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13] 경험론적 측면에서 탈라소테라피에 대한 흔적은 고대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해수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금의 탈라소테라피 형태를 가진 것은 루이 유진 바고(Louis-Eugene Bagot) 박사가 1899년 로스코프(Roscoff)에 설립한 해양요법시설이 최초이다(박영은, 2007).[14] 이후 1913년에 해수요법에 대한 국제적 단체가 창립되었으며, 1964년에는 사이클 챔피언인 루이스 보벳이 퀴베론(Quiberon) 센터를 설립하며 탈라소테라피의 대중화가 촉진되었다(박영은, 2007).

13) 프랑스 투데이(검색일: 2018. 8. 13)
14) 박영은, 「딸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의 이론적 고찰」,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2007.

〈표 2-5〉 탈라소테라피의 역사

구분	내용
16세기 후반	• 헨리 3세의 외과 주치의인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e)가 특정 피부질환 치료에 해수욕을 제공함
17세기 중반	• 영국 의사 존 플로이어(John Floyer)가 류머티즘 완화에 이용
1750년	• 영국인 리처드 러셀(Richard Russel) 박사가 해수의 치유 속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현대 해수요법이 주목받음
1865년	• 프랑스 생리학자 르네 껭통(Rene Quinton) 박사가 바닷물 속에서 백혈구가 성장하는 실험을 통해 혈장과 해수 사이의 유사성을 보이는 논문을 발표, 해수의 치료 효과를 입증함
1899년	• 루이-유진 바고 박사가 로스코프 지역에 최초의 탈라소테라피센터를 설립
1903년	• 바고 박사는 해수의 물리화학적 풍부함과 기후를 통한 치료를 정립하고 따뜻한 해수 속 운동을 통해 류머티즘을 완치함으로써 바닷물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키네-발네오테라피(Kine-balneotherapy)를 개발함
1908년	• 모나코에서 해수를 이용한 온천이 최초로 설립됨
1950년	• 프랑스 의사 데니 뢰로이(Denis Leroy)가 재활치료에 키네-발네오테라피를 접목시켜 외연을 확장함
1964년	•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 루이종 보베가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질환을 로스코프 해양연구소에서 해수요법을 통해 완치한 후 1964년에 바닷가 건강·레저 개념을 도입한 직업 훈련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현대식 탈라소테라피 센터를 퀴베롱에 설립함

자료: 윤인주 외(2017), 「해양치유시설의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항해항만학회 발표자료, p. 5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프랑스 내 해양요법 시설은 83개소 정도이다. 매년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중 랑그독-루시용, 아키텐, 라 볼 지역 등은 해양리조트 및 대중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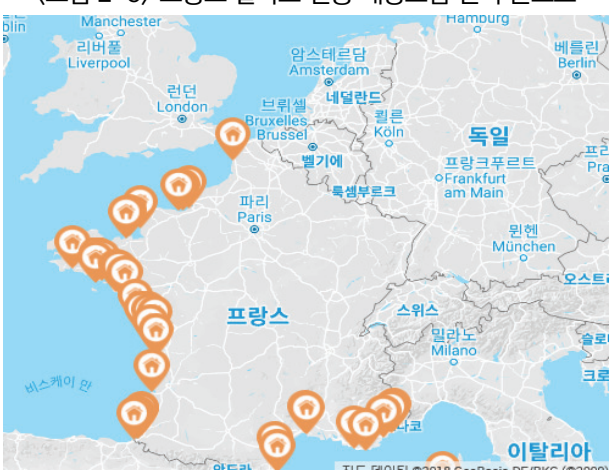
프랑스 해안의 해양치유는 지리와 기후의 차이로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치료효과를 달리하고 있다(박영은, 2007). 영불해협 지역 해안선은 간만의 차가 심하여 조수에 영향을 미치는 서쪽

15) 최일선·이정아, 「국내 해양치유관광 현황과 발전 전망」,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공기에 요오드와 올리고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생기 제공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서양 해안은 프랑스 해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의 순도가 탁월하게 유지되며 올리고당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강장 효과를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지중해 해안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는 휴식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어서 진정효과 제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영은, 2007).

프랑스 해양요법 센터는 민간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로부터 품질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은 자연보호 및 경관의 우수성, 천연해수 사용 유무, 의학적 지도 및 치료, 물리치료, 수치료, 영양사 등 전문가 보유, 위생과 보완, 규격화된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 프랑스 탈라소로부터 인증을 받은 해양요법 센터는 37개소이다.

〈그림 2-5〉 프랑스 탈라소 인증 해양요법 센터 분포도



자료: 프랑스 탈라소(검색일: 2018. 8. 20)

프랑스 탈라소로부터 인증 받은 시설 중 대표적인 곳인 탈라주르(Thalazur)는 1994년 설립되어 프랑스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모든 연안지역에 위치하며 9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박 3일에서 6박 7일 정도의 기간이며, 그 이상 기간의 프로그램도 있다. 2박 3일 프로그램의 가격은 약 720유로(한화 약 92만 원) 정도이며 스트레스 완화, 미용 프로그램, 임산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림 2-6〉 탈라주르 센터 분포도 및 시설 사례

자료: 탈라주르 센터(검색일: 2018. 8. 20)

이 밖에 프랑스의 해양요법 센터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및 요법은 다음과 같다.

〈표 2-6〉 프랑스 해양요법 센터 대표 프로그램 및 요법

구분	내용
스트레스 회복	• 목욕, 해초나 진흙 이용, 샤워 등 마사지, 정신심리적 안정요법, 해수요법 등을 사용하여 이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
금연	• 해수요법 이외에 금연을 돕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육체적인 활동과 휴식 프로그램 제공
피부미용과 미적관리	• 살빼기, 마사지, 몸매 및 얼굴관리, 손발관리 등 해수 치료법을 이용하여 미용 프로그램 제공
식이요법과 다이어트	•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의사와 영양사들에게 영양섭취에 대한 세미나와 요리강습 등을 통해 실시
등(척추) 요법	• 요통예방, 바른 자세를 위한 방법 등 특별한 치료법을 제시
폭포(습식요법)	• 따뜻한 바닷물을 어깨에 떨어지게 하여 목의 근육을 이완시킴
캐비토조닉(보조요법)	• 광선의 효과에 의해 이온 처리된 방에서 바닷물을 증기 상태로 바꾸어 신경계를 자극시킴
관주요법 샤워(습식요법)	• 누운 자세에서 바닷물을 비처럼 뿌려 진정과 이완의 효과가 있는 마사지
아로마 샤워(습식요법)	• 증기 상태의 바닷물에 향기를 첨가하여 긴장의 완화와 안락함을 제공
해저 샤워(습식요법)	• 따뜻한 바닷물 목욕이 주는 안락함과 물을 분사할 때의 압력으로 마사지 효과를 결합시킴
전기치료법(보조요법)	• 전기의 다양한 파장의 사용에 근거하여 근육 통증과 류머티즘을 치료
다리를 물에 담그기(습식요법)	• 10℃의 바닷물과 해초가 섞여 있는 물을 번갈아가며 담가 다리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
터키식 목욕탕(보조요법)	• 긴장완화와 피부 세척을 위해 50℃ 정도의 증기를 쐬는 법
걷기(보조요법)	• 인솔자와 함께 해변이나 숲 걷기를 시행
마사지(건식요법)	•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요법 안마사에 의한 개인 마사지
펠로테라피(해초와 진흙)	• 몸 전체의 진통 완화와 항염을 목적으로 한 치료법
프레소테라피(건식요법)	•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혈관 재생을 개선시키는 누르기법 시행
수영장에서 훈련(습식요법)	• 따뜻한 바닷물로 채워진 수영장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동작 훈련을 시행

자료: 박영은(2007), 「딸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의 이론적 고찰」,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pp. 233~255 재구성

한편 프랑스는 해양치유를 대중적인 대체의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안가에 위치한 건강리조트의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Gutenbrunner & Bender, 2010).

2. 독일 해양치유정책

독일의 치유정책은 1884년 국가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1919년 1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질병건강관리 및 사회보장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치유정책은 연령에 따라 중장년층까지는 일상생활과 직장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며, 노년 및 고령층은 삶의 질 보장이 목적이다. 독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유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휴식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적 치유 및 재활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목표하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을 통해 치유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며 재활, 건강회복 등 목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치유휴양지인 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걸쳐 350개소 이상의 쿠어오르트가 분포하는데 광천·온천, 크나이프, 기후, 라돈 등 치유자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연안지역에 위치한 쿠어오르트에서는 해양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쿠어오르트 이용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해양치유 및 해수욕 쿠어오르트 이용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 유형별로는 2016년 기준 미네랄광천치유/온천수광천치유/모아광천치유 쿠어오르트 이용자가 전체의 36.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가 35.4%, 기후휴양치유 쿠어오르트가 18.5%, 크나이프 광천치유/휴양치유 쿠어오르트가 9.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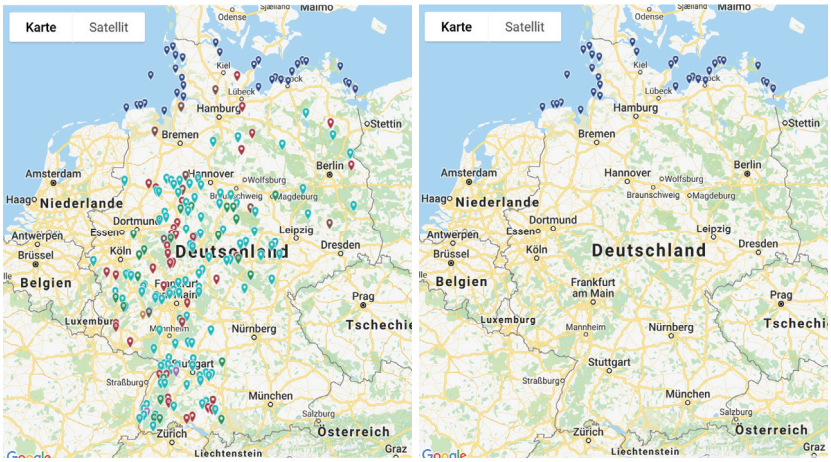
〈표 2-7〉 독일 쿠어오르트 이용자 현황(2007~2016년)

(단위: 명, %)

구분	미네랄광천치유, 온천수광천치유, 모아광천치유 쿠어오르트	기후휴양치유 쿠어오르트	해양치유, 해수욕 쿠어오르트	크나이프 광천치유/휴양치유 쿠어오르트	합계
2007	7,074,296	3,427,895	6,347,201	2,104,294	18,953,686
2008	7,197,065	3,503,279	6,504,031	2,126,503	19,330,878
2009	7,199,068	3,231,745	6,621,158	2,471,037	19,523,008
2010	7,667,580	3,371,706	6,630,696	2,435,271	20,105,253
2011	8,204,474	3,793,347	7,636,156	2,320,606	21,954,583
2012	8,348,470	4,090,337	7,725,343	2,278,482	22,442,632
2013	8,387,226	4,134,051	7,893,818	2,283,422	22,698,517
2014	8,681,322	4,265,378	8,248,619	2,324,400	23,519,719
2015	8,912,100	4,486,164	8,493,201	2,392,608	24,284,073
2016	9,204,646	4,684,009	8,975,666	2,476,218	25,340,539
전년 대비 증감률	3.30	4.40	5.70	3.50	4.40

자료: 독일해양치유협의회(Deutscher Heilbäderverband e.V.)(207), “Jahresbericht 2017”, p. 8

〈그림 2-7〉 독일 쿠어오르트 분포 현황



전체 쿠어오르트 분포 현황　　해양치유/해수욕 쿠어오르트 분포 현황

자료: 독일해양치유협의회(검색일: 2018. 8. 24)

독일 내 쿠어오르트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법 제5권(Sozialgesetzbuch: SGB V)」과 「예방법(Präventionsgesetz)」 등 연방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쿠어오르트는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 시설의 경우 독일해양치유협의회(Deutscher Heilbäderverband e.V., DHV)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892년에 설립된 독일해양치유협의회는 해양치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등급을 정하는 민간단체로, 독일 내 쿠어오르트에 대해 해양과의 인접성, 인프라(병원, 치유요법 등) 보유 수준, 자원 등을 기준으로 9개 범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협의회는 독일 내 스파 및 쿠어오르트 253개소, 입욕 및 기후학 관련 회원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개 해양치유 쿠어오르트가 등록되어 있다.

〈표 2-8〉 독일 쿠어오르트 유형별 인증 요건

쿠어오르트 명칭	인증 요건
미네랄광천치유, 온천수광천치유 또는 모아광천치유 쿠어오르트 (Mineral-, Thermal-, Moorheilbad)	• 대지에서 얻어지는 자연치료제가 과학적 경험치 또는 해당 시기의 과학적 인식상태에 의하여 휴양치료제로서의 적합성이 확증된 경우 • 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바이오기후와 충분한 대기질 기도질환 증상을 위하여 대기 질에 대한 상승된 요건 • 환경 보전 • 의학적으로 인정된 주치료처방(적용지역들)과 금기처방을 과학적 감정을 통해 확립
치유제-휴양치유, 갱도휴양치유 또는 펠로이드-휴양치유 쿠어오르트 (Heilquell-Kurbetriebe, Heilstroll-Kurbetrieb, Peloid-Kurbetriebe)	• 대지 또는 기후의 천연 치료제들이 과학적 경험과 또는 해당 시기의 과학적 인식상태에 의하여 휴양치료제로서 적합하다고 확증된 경우 • 충분한 대기질 기도질환 증상을 위하여 대기질에 대한 상승된 요구조건들을 충족 • 환경 보존 • 의학적으로 인정된 주치료처방(적용지역들)과 금기처방을 과학적 감정을 통하여 확립 • 아직 쿠어오르트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장차 쿠어오르트로 발전 가능성이 크며 원천치료제를 사용하는 치유시설 사업장이 밀집된 곳을 의미
해양치유 쿠어오르트 (Seeheilbad)	• 해안가나 해안으로부터 2㎞ 이내에 위치 • 이전 경험을 통하여 확증된, 기후자극 치료가 가능한 생태기후조건과 고도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대기질 • 환경 보존 • 과학적 인증을 통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주처방 또는 금기처방 확립
해수욕 쿠어오르트 (Seebad)	• 해안가나 해안으로부터 2㎞ 이내에 위치 • 바이오 기후적으로 최적화된 위치와 충분한 대기질. 기도질환에 요구되는 대기의 높은 질적 수준 충족 • 환경 보존
크나이프 광천치유 쿠어오르트 (Kneippheilbad)	• 경험을 통하여 검정된 생태기후조건과 충분한 대기질 • 크나이프 방식을 따라 질병의 종류를 고려한 생리치료 수행 • 환경 보호 • 의료-광천학적 인증을 통하여 질적 안정성을 확보한 크나이프 요법 시행

쿠어오르트 명칭	인증 요건
	• 10년간 하자 없이 존속된 크나이프 쿠어오르트
크나이프 휴양치유 쿠어오르트 (Kneippkurort)	• 경험을 통하여 검정된 바이오기후조건과 질적으로 충분한 대기 • 환경 보존 • 의료 광천욕 인증을 통하여 질적 안정성을 확보한 크나이프 요법 시행
기후휴양치유 쿠어오르트 (Heilklimatischer Kurort)	• 이전 경험을 통하여 확증된, 기후자극 치료가 가능한 생태기후조건과 고도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대기질 • 지역에 고유한 치료제로서 대기의 질을 검사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수단 • 환경 보존 • 의료 광천욕 인증을 통하여 질적 안정성을 확보한 크나이프 요법 시행
대기휴양치유 쿠어오르트 (Luftkurorte)	• 치료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하여 검정된 생태기후와 질적으로 충분한 대기 • 환경 보존
휴양 쿠어오르트 (Erholungsort)	• 바이오 기후적으로 우수한 입지, 질적으로 충분한 대기 • 환경 보존

자료: 독일해양치유협의회, 내부 자료, 「해양치유 관리규정집」

독일의 해양치유 시설은 해양치유 쿠어오르트와 해수욕 쿠어오르트로 구분된다. 독일해양치유협의회의 인증 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치유 시설은 해안으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대기 및 수질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독일해양치유협의회는 일반적인 인증 요건 외에 해양치유 시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공간 및 시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요건에 따르면 해양치유 시설은 의사가 상주해야 하며, 해변 산책로, 공원, 해변 경관 감상길, 놀이·스포츠 공간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해양치유 쿠어오르트는 ① 진찰과 처방이 가능한 진료실, ② 교육 및 운동요법이 가능한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표 2-9〉 독일 해양치유 시설 인증 요건

구분	인증 요건
해양치유 쿠어오르트 (Seeheilbad)	• 의료보험환자 진료자격 의사 최소 1명 상주 • 대기자극요법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풍지대 또는 해변지대에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시설물(산책로, 길, 설비, 대기요법 요양실, 방풍방갈로, 수풀조성) 보유 • 해수욕, 머드욕, 찜질, 일반물리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휴양치유 건물(공간) 보유 • 환자나 고객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환자 교육센터의 기능을 가진 건물(공간) 보유 • 운동요법을 위한 시설 보유 • 스포츠 시설, 게임 프로그램 보유
해수욕 쿠어오르트 (Seebad)	• 휴양치유 의사 최소 1명 상주 • 질적, 양적으로 적절한 업무 인원과 시설물을 갖춘 잘 관리된 모래사장 보유 • 해변 인근에 산책로 보유

자료: 독일해양치유협의회, 내부 자료, 「해양치유 관리규정집」

〈그림 2-8〉 독일 해양치유 시설 사례

자료: 독일 북해섬 안내(검색일: 2018. 8. 24).

3. 일본 해양치유정책

일본은 1990년대부터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해양치유가 도입되었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본토 규슈 남단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700㎞ 떨어져 있으며, 류큐제도의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키나와는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본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급격히 발달했는데 오키나와 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의 비중이 70%에 달하며, 특히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16] 이러한 여건 아래 오키나와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연중 온화한 기후와 뛰어난 자연환경 자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프랑스식 해양요법 시설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림 2-9〉 일본 해양치유 시설 분포 현황 및 시설 전경

자료: (좌)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KMI 동향분석」, 제55호, p. 10 재인용, (우, 좌하)칸나탈라소라구나 (검색일: 2018. 8. 25), (우하)Thalgo Laguna 브로슈어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치유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걸쳐 해양치유 관련 시설은 26개소

16) 제주의소리,「오키나와 헤노코에서 떠올린 제주 강정」, 2013.3.17(검색일: 2018. 8. 25).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양치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이다. 특히 오키나와는 평균수명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노인 및 은퇴자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오키나와는 지역 대학과 민간 사업체가 중심이 되어 해양치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주도로 해양치유 시설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17] 해양치유 시설과 대학이 협력하여 해양치유 시설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 효과를 측정하는 등 민간 주도로 해양치유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치유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이용료를 할인해 주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오키나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치유 시설을 지역 내 1차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즉, 노인의 자립성을 높이는 '개호(介護)예방' 차원에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치유 시설이 고급 리조트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의 시설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0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는데, 2017년 기준 일본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7.3%이며 50세 이상 인구도 절반에 달한다.[18] 일본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보장 예산 급증에 대응하

17) 오키나와의 류큐대학은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안정성·유효성·가치창조성을 기준으로 한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함.

18) 아주경제, 「'100세 인생'은 위기 아닌 기회…일본의 '라이프 시프트'」, 2018.8.22; 조선일보, 「초고령사회 일본, 베트남서 간병인 1만명 데려온다」, 2018.7.26(검색일: 2018. 8. 25).

여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적 의료와 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본은 해양치유를 지역주민, 특히 노인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증진, 회복, 치유와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도입·활용해 왔으며, 해양치유에 대한 법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 민간 주체 주도로 자율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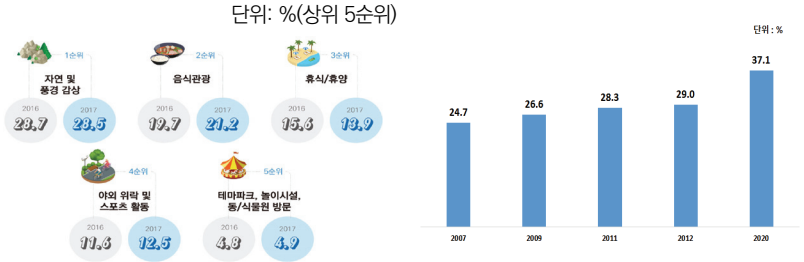
제3절 국내 치유 및 복지정책 동향

1. 산림치유·복지정책

1) 산림치유·복지정책 전개 과정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국민들이 스포츠, 오락 등 취미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 환경 개선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여가 활동 반경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회의 복잡화 심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이나 병원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2-10〉 국내 관광여행 주요 활동과 만성질환자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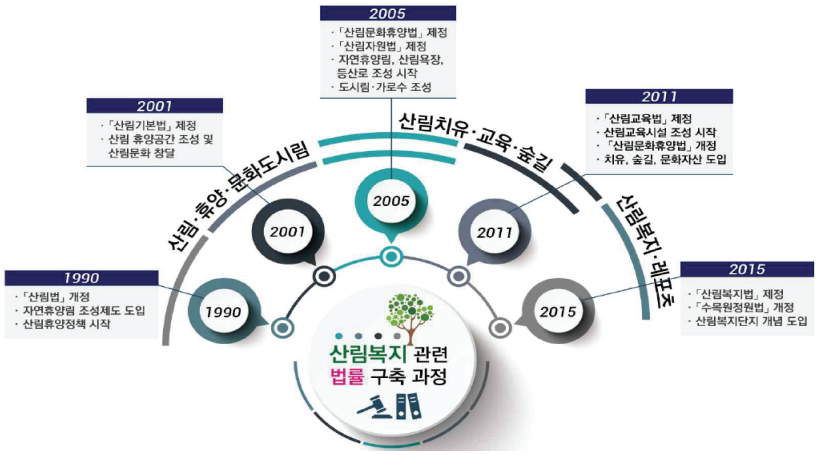


국내 관광여행 주요 활동　　전체 환자 중 만성질환자 비중

자료: (좌)문화체육관광부(2018. 5),「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p. 22, (우)국민건강보험공단; 동아일보,「건강예방투자 늘리면 50대 당뇨환자 최대 36% 줄어」 2014. 11. 10(검색일: 2018. 8. 21) 재정리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로 산림청이 대표적이다. 산림청은 1990년대「산림법」개정을 시작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건강증진, 심신의 안정 차원에서 산림복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2000년대부터는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1년 제정된「산림기본법」과 2005년 제정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의 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 창달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는 한편 산림을 휴식 및 쉼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09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계획(2009. 9)' 수립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 관련 조직·제도 정비, 공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치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림 2-11〉 산림복지 관련 법률 구축과정



자료: 산림청(2017), p. 6 재정리; 홍장원 외(2017), p. 25 재인용

2) 산림치유·복지정책 추진 방향

산림청은 2005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산림욕장, 숲길,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유아숲체원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산림교육 시설 건립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추진해 왔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온 산림치유·복지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은 2013년 수립된 '산림복지종합계획(2013~2017)(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1차적으로 종합화되었다. 산림치유·복지 관련 정책들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2008~2017)', '산림치유 활성화 추진계획(2012~2017)', '산림교육 종합계획(2013~2017)',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도시림 기본계획(2008~2017)', '산촌진흥 기본계획(2008~2017)' 등 다양한 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된 정책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종합계획'을 통해 산림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비전 및 전략별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산림복지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해 협의의 산림복지를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했다. 산림청은 협의의 산림복지를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산림복지로 국민행복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R&D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으로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산림치유·복지 관련 정책들을 체계화·종합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 2-10〉 산림복지 종합계획(2013~2017)의 세부 내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 확대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생활권 산림복지공간을 활용한 도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환경과 문화를 조성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 생애주기·건강상태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산림복지 제공 •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전 생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공공, 민간 산림복지 전달체계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 • 산림복지자원 DB 구축으로 정부 3.0 실현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 •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합리화 및 투자재원 마련 •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R&D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림복지 연구의 체계적 추진 • 맞춤형 산림복지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 산림복지정책 시행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

자료: 산림청(2013), pp. 24~25 재정리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복지 체계 확립을 위해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산림복지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정의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산림복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법에 근거하여 법정계획인 '산림복지 진흥계획(2018~2022)(이하 '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진흥계획'은 '숲과 함께 하는 삶, 행복이 더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6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6대 목표와 추진전략별 이행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1〉 산림복지 진흥계획(2015~2022)의 세부 내용

목표	추진전략	이행과제
숲에서 유아·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숲체험·교육시설 확대 조성 및 접근성 개선 • 산림교육시설과 주변 산림환경의 안전관리 강화 • 유치원·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 확대 • 청소년 산림교육 핵심주체 육성 및 참여 캠페인 전개
	산림교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협업 네트워크 강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 • 연령·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관계부처·민간 유관단체 등과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숲이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문화를 위한 공간이 됩니다.	숲길을 걷고 등산을 즐기는 산행인구 증가 견인 및 만족도 제고	• 자연친화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숲길 조성 확대 • 숲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 • 건전하고 안전한 숲길·등산문화 정착 및 확산
	산림레포츠 활성 및 산업화 지원	•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림레포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교류·협력 확대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 산림복지 전담기관을 통한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숲에서 사람이 치유되고, 휴양과 안식을 온전히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 산림치유의 체계적 제공 및 특성화 운영 확대 •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산림치유서비스 확대

목표	추진전략	이행과제
누리게 됩니다.		• 산림치유 효과성 증진 및 서비스 확산
	국민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 제공	•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 • 숲속야영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 조성·확대 운영 •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수목장림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장례문화 선도	• 권역별 공공수목장림 확충·관리 및 조성방식 다양화 • 수목장림 국민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 지원체계 마련
숲과 자연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옵니다.	숲 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실현	•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및 도시숲 조성·관리 유형 다양화 • 도시숲·가로수 건강성 관리 강화 및 순기능 증진
	정원·수목원을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거점으로 적극 활용	• 생활권 주변 정원 조성 확대 및 정원문화 저변 확대 • 수목원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촌을 귀산촌인의 제2의 고향으로 육성	• 산촌특구 지정을 통한 산촌 활성화 및 귀산촌 정착 지원
산림복지 체감도가 올라가고, 산림복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산림복지 연구 강화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산림복지정책 효과 연구 및 국제교류 강화 • 숲에On 사이트 운영 활성화 및 예약시스템 개선
	산림복지서비스 전문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산업화 유도	• 산림복지 분야별 전문일자리 창출 및 확대 • 산림복지전문업 내실화를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
소외계층 국민들도 차별 없이 숲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개선	•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녹색자금을 활용한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 재원 다원화

자료: 산림청(2017), pp. 35~36 재정리

'진흥계획'은 '종합계획'에 비해 목표가 세분화되었으며, 추진전략 및 이행과제의 내용도 구체화되었다. 또한 '진흥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계획의 실행을 담당할 부처와 추진 일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을 명시해 정책 집행력을 강화했다.

산림치유·복지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은 '진흥계획'의 세부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크게 복지서비스 대상의 확장 및 지역 균형 발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산림치유·복지정책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와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9] 즉,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 제공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라는 측면에 입각해, 빈곤계층이나 사회 소외계층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복지로 수혜 대상을 확장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표 2-12〉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

구분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빈곤계층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기본적 생활보장서비스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괄
재정지원 방식	공급자(기관) 지원	수요자 지원방식 병행
비용 부담	정부지원 중심	본인 일부 부담 도입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보호 중심	재가 서비스까지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검색일: 2018. 8. 21)

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지역주도형 서비스 발굴 및 기획, 공급자 양성 및 관리, 사업 성과관리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지역의 역량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서비스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박세경(2016. 7), pp. 45~47).

둘째,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 가로수, 정원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산림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산림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동성이 부족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이 산림을 통한 치유, 휴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산림치유·복지정책은 도시민뿐만 아니라 산촌주민들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범위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면서도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산림복지 인프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해양치유·복지정책

1) 해양 부문 복지정책 전개 과정

우리나라는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농어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20] 또한 산림 부문에 비해 해양 부문에 치유 개념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농어업인 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에 치유와 관련된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해양 부문에 대한 복지정책은 농촌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 어촌, 어업인만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해양복지 및 해양치유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해양 부문의 치유·복지정책에 대한 검토는 농어촌 복지 관련

20) 최성애 외(2013), p. 33.

법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낙후되었으며, 농어가소득 정체로 인해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가구 증가로 인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농어촌이 위치한 면지역과 군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2012년 기준 약 62%에 불과해 도시 지역의 99.6%에 비해 기초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21]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는 도시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하며,[22] 지역별 의사 분포 비율도 농어촌 지역 4.5%로 대도시의 60.7%와 중소도시의 34.8%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취약하다.[23] 아울러 근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0년 기준 80.5%, 어가소득은 65.9%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각각 62.5%, 69.8%로 특히 농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24] 또한 농어촌의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원인 독거노인가구의 비중은 2015년 기준 23.0%로 도시의 17.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25]

정부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을 거치면서 농산물 수입 증가,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세 감축 압력 등으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

21) 관계부처 합동(2014. 12), p. 5.
22)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7,470개소로 도시(57,529개소)의 약 13.0% 수준(농촌진흥청(2018. 3), p. 193).
23) 관계부처 합동(2014. 12), p. 10.
24) 관계부처 합동(2014. 12), p. 4.
25) 농촌진흥청(2018. 3), p. 199.

화되었다. 농어업 소득의 감소로 인한 이촌 현상의 심화는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및 복지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는 농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률로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을 들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제3장의 12조부터 19조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3〉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중 농어업인 복지 관련 조문

구분	조문 내용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 치료 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 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분	조문 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 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 ·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 ·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 (농어촌 지역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후략)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

구분	조문 내용
	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략)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 ① 정부는 보험회사 등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후략)

주: 치유 개념이 포함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8. 8. 23)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농어업인 복지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보육비 지원, 여성 및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고령 농어업인 생활안정 및 영양개선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며 주로 복지서비스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 및 검진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질환에 대한 치료 외에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간접적이나마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치유의 개념이 가미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근거하여 5년

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계획은 민·관 합동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18개 부·청이 협력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그동안 '제1차 기본계획(2005~2009)'과 '제2차 기본계획(2010~2014)'이 수립·추진되었으며,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5~2019)'이 추진 중이다.[26]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기본계획'은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의 비전 아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에 걸쳐 총 4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2-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의 세부 내용(일부)

부문	주요 과제	
보건·복지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개선 • 농업인 중층적 노후안정 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역량 강화 •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사각 해소 • 공공보건의료 시설, 장비 현대화 •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 취약가구 자립 지원 •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여성친화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 다문화 사회통합환경 조성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 보건복지 연계 지원 • 거버넌스, 민간조직 공조 강화

26) '제1차 기본계획'은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하여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걸친 133개 과제에 22조 8천억 원을 투입했다. 이후 '제2차 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보건·복지, 교육여건, 기초 인프라, 경제활동 및 지역역량,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조 5천억 원을 투입했다.

부문	주요 과제	
정주생활기반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농어촌 생활권 정주기반 강화 •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 주민체감형 협력사업 발굴, 지원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주민 주도 지역개발 방식 확산 • 상향식 지역개발 지원체계 구축 • 농촌 마을의 유형별, 역량단계별 지원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기초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취약계층의 우선적 주거환경 개선
경제활동·일자리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농수산물 가공 및 신유통 활성화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 사업 주체별 맞춤형 지원 • 6차산업 사업화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농어촌 관광 체계화, 품질제고	• 농어촌 관광 추진체계 정비 •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역량 강화 • 농어촌 관광 다변화
	농어촌 일자리 지원	• 일손 부족 해소 •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 개선 • 공동체사업 활성화
문화·여가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 확대 • 문화, 여가 전문인력 양성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 문화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 생활문화 기반 확충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전통, 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 전통, 향토문화자원 복원, 전승 • 전통, 향토문화자원 활용 확대

주: 치유 개념이 포함된 항목은 밑줄로 표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12),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에는 각 부문별로 치유 개념이 포함된 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우선 보건·복지 부문에서 인구구조, 건강문제, 주민수요 등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단위 복지 및 상호 돌봄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한다. 다음으로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영양, 위생 등 기본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산림휴양·치유공간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등 생활권 내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일상에서 휴양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즉, ‘제3차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 및 치유 개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농어업인 복지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방향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림치유·복지정책에 비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정책적 도입을 논의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 또한 해양 부문의 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은 어촌과 어업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농촌 및 농업인과 함께 묶여 다루어지면서 해양 부문만의 특징을 반영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 예를 들면 어가인구는 2010년 약 17만 명에서 2015년 약 13만 명으로 연평균 8.4% 감소했으나, 같은 시기 농가인구는 306만 명에서 257만 명으로 연평균 3.5% 감소해 어가인구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어가의 고령화율은 2010년 23%에서 2015년 31%로 연평균 1.6% 증가했으나, 농가의 고령화율은 같은 시기 32%에서 38%로 연평균 1.3% 증가해 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27] 아울러 우리나라 해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내에서 복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도 소득복지과와 어촌어항과 2개 과에 불과해 정책 추진 체계가 다소 미약하다. 또한 정책 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정책 고려 대상이 아니며, 정책 내용도 어업인의 경제·정주여건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어업인 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5〉 해양수산부 제3차 삶의 질 향상 추진과제 현황

부문	추진과제	
보건·복지	•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 어업안전 보건센터 지정 운영 • 취약어가 인력지원	
생활권 기반	•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 수산정보이용 활성화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 •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 어항 유휴공간 활성화 지원 • 어촌공동체경영 활성화 지원 • 어촌 공동체 갈등관리 강화 지원
경제활동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수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농가-마을-거점별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어촌관광 활성화 •
환경·경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해양폐기물 정화 • 갯벌생태계 복원 • 위생관리형 어항개발 지원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 친환경 어구 보급 • 친환경 에너지 보급 •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안전	• 수산인 안전보험 지원 •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국고 여객선 건조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형 어항시설 보강

주: 1)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 중 해양수산부 담당 과제만 정리
2) 치유 개념이 포함된 항목은 밑줄로 표시
자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내부 자료

2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농림어업조사」, 각 년도(검색일: 2018.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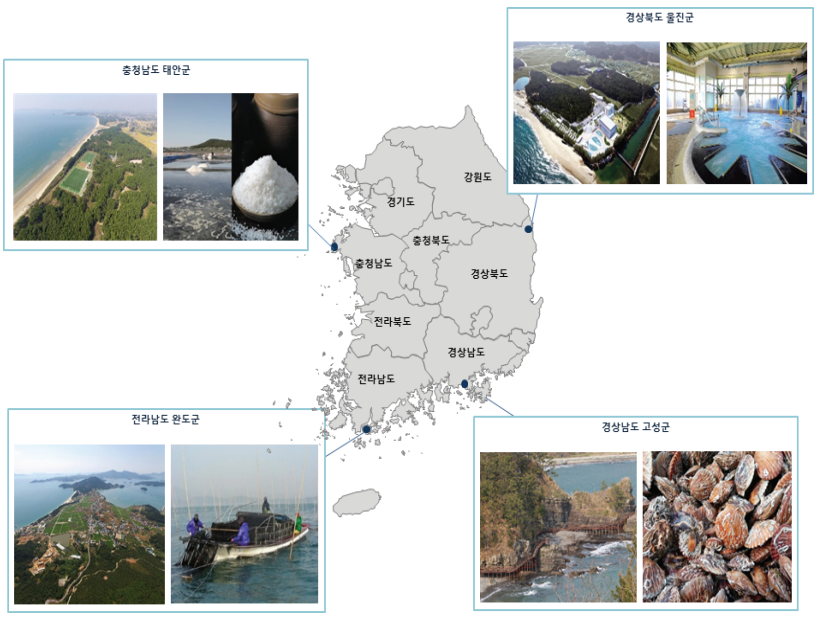
소득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복지 관련 정책 중 치유 개념이 적용된 정책은 보건·복지 부문의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어업안전 보건센터 지정 운영, 경제활동 부문의 농가-마을-거점별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치유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설 조성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분적으로나마 해양을 통한 치유와 휴양·복지서비스를 향유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어촌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변화하고 해양자원이 가진 치유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와 휴양·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연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양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 속에서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치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 바다, 강, 호수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휴식, 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양치유와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해양자원의 효과 및 치유력에 기반한 해양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 확산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 국민이 해양자원을 통해 치유 및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내용은 물론 적용 대상 차원에서도 확대된 해양치유·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4개 협력 지자체(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를 선정하고 해양자원을 통

한 치유와 휴양·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해양수산부는 4개 협력 지자체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특화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28]

〈그림 2-12〉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자체 선정 지역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제55호 ; 홍장원 외(2017), p.44 재인용

2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양치유산업 본격 추진한다」, 2017. 10. 17.

제4절 시사점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와 국내 관광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관광산업은 휴식과 쉼, 건강과 힐링을 주요 테마로 하는 웰니스 관광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치유관광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국내 웰니스 관광시장은 산림, 한방, 뷰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해양 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도 프랑스의 해양요법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왔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해양치유를 보완대체요법으로 인정해 환자의 재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사가 오래되며 치료의 목적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역주민, 특히 노인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해양치유 관련 법제도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으며 해양치유 시설 이용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관광정책은 국민의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휴식 있는 삶'을 국정과제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을 활용한 복지 및

치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 분야인 산림복지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을 통한 휴식 및 쉼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복지서비스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산림치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 부문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농어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농촌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 어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에서도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4개 협력지자체를 선정하고 해양을 통한 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해양치유정책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예정에 있는 등 국민을 위한 해양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국내 해양 부문의 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은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와 국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라는 테마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해양을 통하여 휴양할 수 있는 휴양·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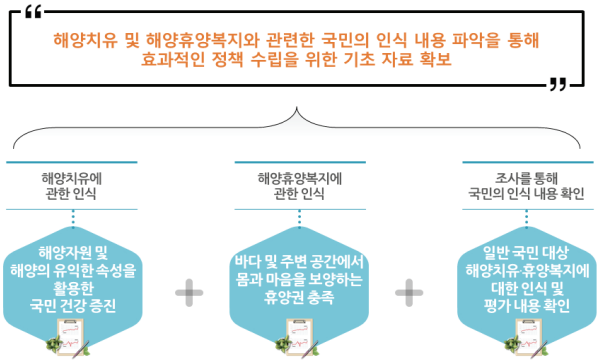
국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국내에 해양치유 개념과 정책이 도입되는 단계이고 해양수산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이 부족한 실정임을 살펴보았다. 향후 해양치유·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해양치유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림 3-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국민인식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국민인식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설계하고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이 설계하고 한국리서치의 감수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29)]

조사 대상은 한국리서치가 보유한 패널이며 2018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설문에 응답했다. 목표 표본은 500명이었고 유효 표본 수는 557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국민인식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한국리서치 보유 패널 (Master Sample)
조사 기간	2018년 8월 2일~9일
유효 표본 수	557명
조 사 방 법	Web Survey 및 Mobile Survey

29) 최종 설문지는 부록 참고.

3.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 557명 중 성별 분포는 여성이 50.6%, 남성이 49.4%이다. 연령별 분포는 19세부터 20대가 19%, 30대와 40대가 각각 25%, 50대가 19.4%, 60대가 10.4%, 70대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9.2%, 경기가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각 광역시·도 거주자가 5~6%대로 나타났다.[30]

〈표 3-2〉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수	비율(%)
■ 전체 ■	557	100.0
□ 성별 □		
남성	275	49.4
여성	282	50.6
□ 연령 □		
19~29세	106	19.0
30대	139	25.0
40대	139	25.0
50대	108	19.4
60대	58	10.4
70대 이상	7	1.3
□ 지역 □		
서울	51	9.2
부산	34	6.1
대구	33	5.9
인천	32	5.7
광주	32	5.7
대전	32	5.7
울산	32	5.7
경기	48	8.6
강원	33	5.9
충북	33	5.9
충남/세종	33	5.9
전북	34	6.1
전남	33	5.9
경북	32	5.7
경남	32	5.7
제주	33	5.9

3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일 때 실제 인구통계와 비례하도록 설계하는 편이다. 표본 수가 500명일 경우 표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할당되고 제주 등 일부 지역에 배정되는 표본 수가 극히 적다.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자 조사 대상을 성·연령·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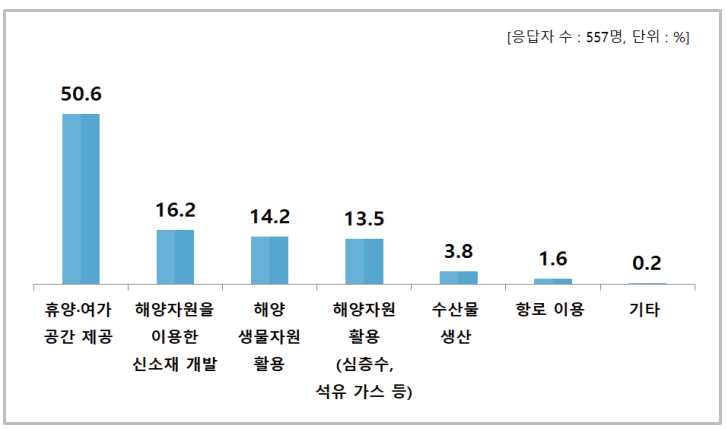
제2절 조사 결과

1.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

1) 향후 바다 이용방법 중 주목받을 부분

향후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주목받을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휴양·여가 공간 제공'이 5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16.2%), '해양 생물자원 활용'(14.2%), '심층수, 석유가스 등 해양자원 활용'(13.5%)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바다를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었던 '수산물 생산'(3.8%)과 '항로 이용'(1.6%)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향후 바다 이용방법 중 주목 받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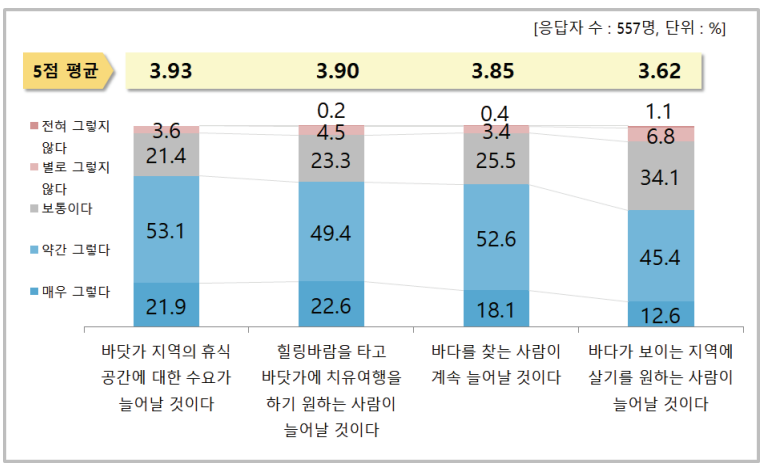


2) 바닷가 방문에 대한 전망

바닷가 방문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 응답자들은 5점 만점 기준으로 '바닷가 지역의 휴식 공간 수요가 늘어날 것'(3.93점), '힐링바람을 타

고 바닷가에 치유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3.9점), '바다를 찾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3.85점) 이라는 순으로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3.62점)이라는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 바닷가 방문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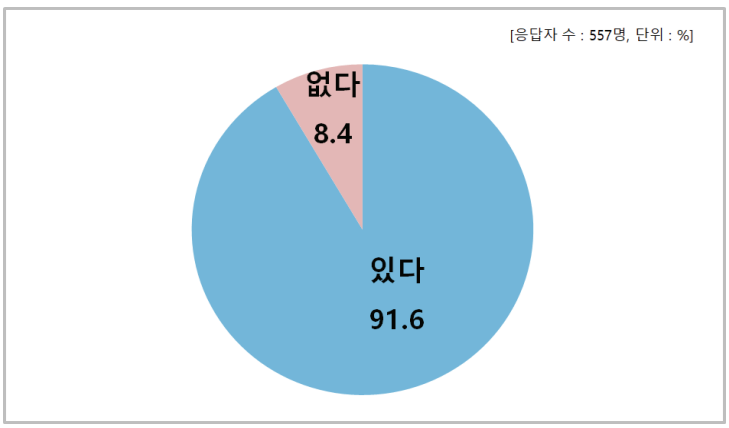


3) 해양치유 체험 의향

해양자원 및 해양의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양치유가 도입된다면 체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91.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8.4%에 불과해 해양치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치유란 해수, 머드, 소금, 해조류 등 해양자원 및 해양의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여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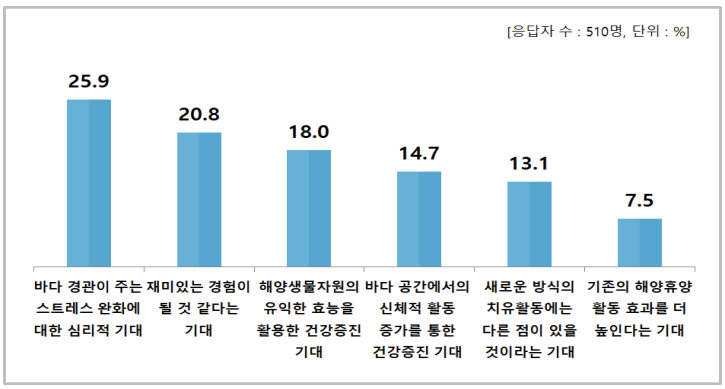
〈그림 3-4〉 해양치유 체험 의향



4) 해양치유 경험 희망 이유

해양치유 체험 의향이 있는 응답자 510명은 해양치유를 경험해보려는 가장 큰 이유로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심리적 기대'(25.9%)를 꼽았다. 다음으로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기대'(20.8%), '해양생물자원의 유익한 효능을 활용한 건강증진 기대'(18.0%), '바다 공간에서의 신체적 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증진 기대'(14.7%), '새로운 방식의 치유활동에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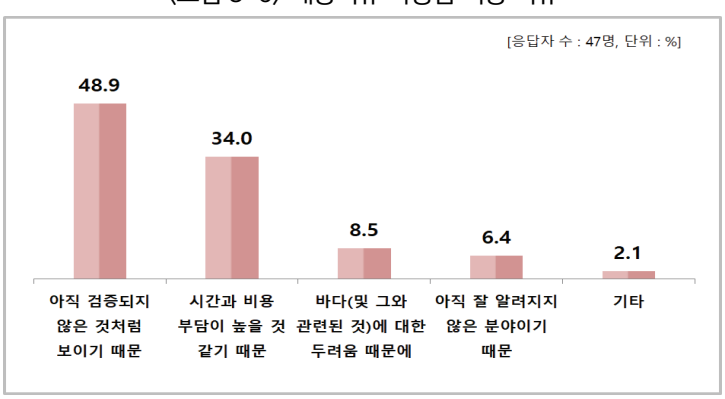
〈그림 3-5〉 해양치유 경험 희망 이유



5) 해양치유 경험 의향이 없는 이유

해양치유를 경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수는 47명인데 이들이 해양치유를 경험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48.9%),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을 것 같기 때문'(34.0%)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8.5%)이라거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6.4%)이라는 응답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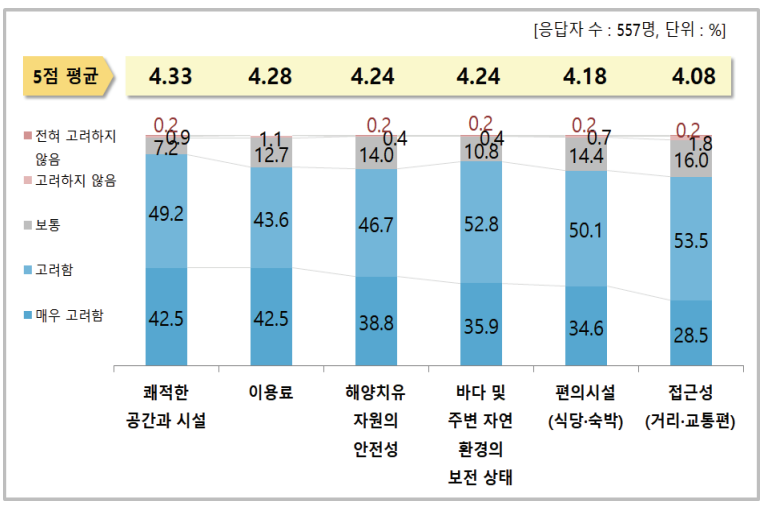
〈그림 3-6〉 해양치유 비경험 희망 이유



6) 해양치유 참여 시 중요 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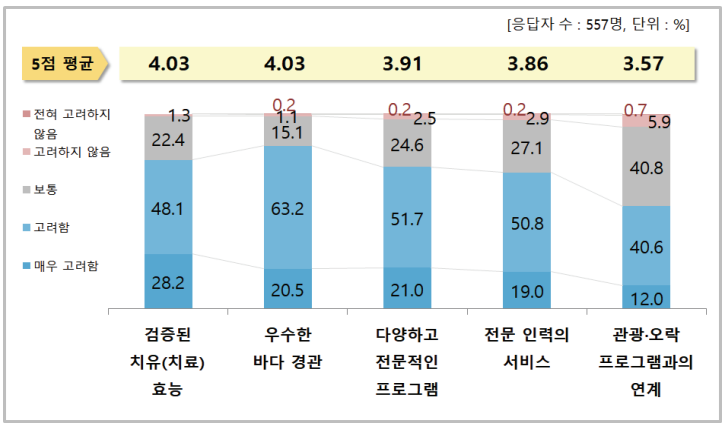
해양치유 참여 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쾌적한 공간과 시설'(4.33점), '이용료'(4.28점), '해양치유 자원의 안전성'(4.24점), '바다 및 주변 자연 환경의 보전 상태'(4.24점), '편의시설'(4.18점), '접근성'(4.0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해양치유 참여 시 중요 고려 요소(1)



반면 '관광·오락 프로그램과의 연계'(3.57점), '전문인력의 서비스'(3.86점),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3.91점) 등은 응답자들이 해양치유에 참여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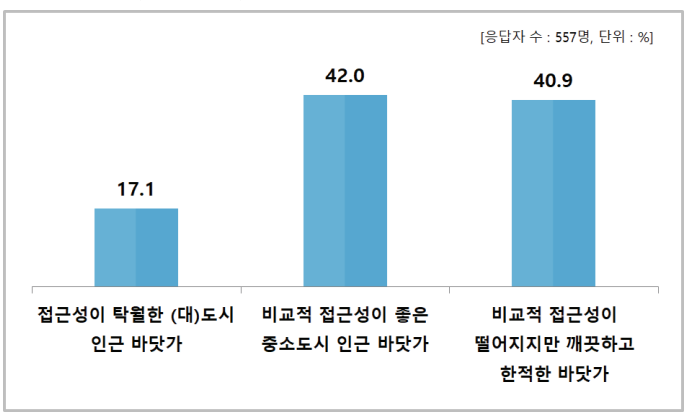
〈그림 3-8〉 해양치유 참여 시 중요 고려 요소(2)



7) 해양치유 공간 조성 희망 지역

해양치유 공간이 조성된다면 어느 곳에 방문하겠느냐는 물음에,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중소도시 인근 바닷가'(42.0%)와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깨끗하고 한적한 바닷가'(40.9%)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이 탁월한 (대)도시 인근 바닷가'(17.1%)에 대한 수요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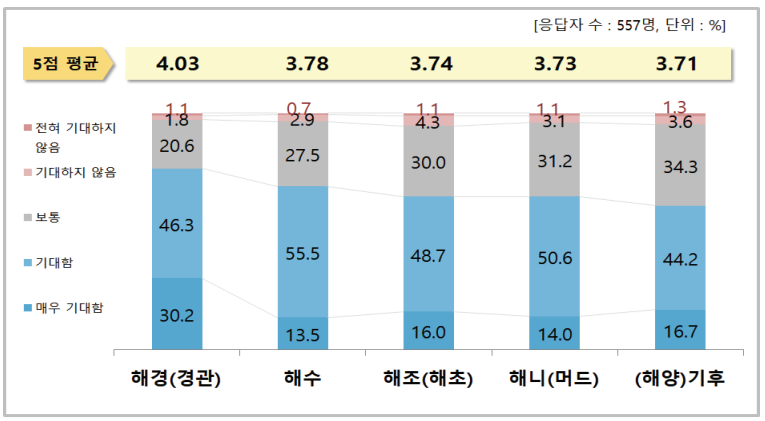
〈그림 3-9〉 해양치유 공간 조성 희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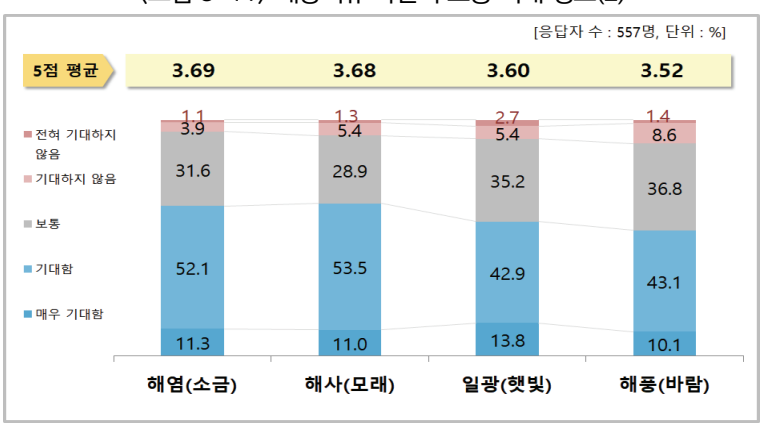
8)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기대 정도

해양치유자원의 효능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해경(경관)'(4.03점)과 '해수'(3.78점)가 높고 '해조(해초)'(3.74점), '해니(머드)'(3.73점), '(해양)기후'(3.71점), '해염(소금)'(3.69점), '해사(모래)'(3.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광(햇빛)'(3.60점)과 '해풍(바람)'(3.52점)에 대한 기대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림 3-10〉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기대 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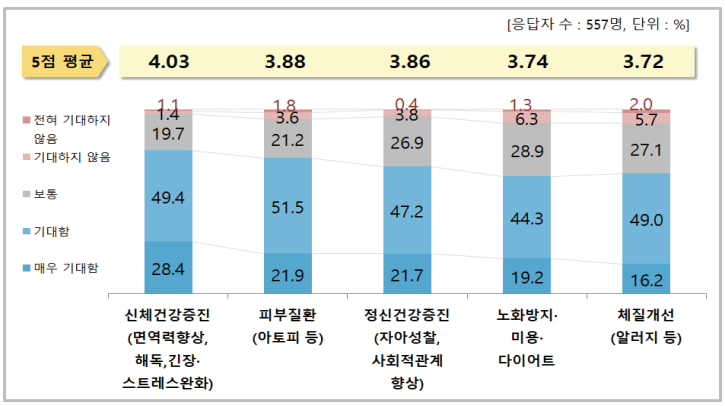
〈그림 3-11〉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기대 정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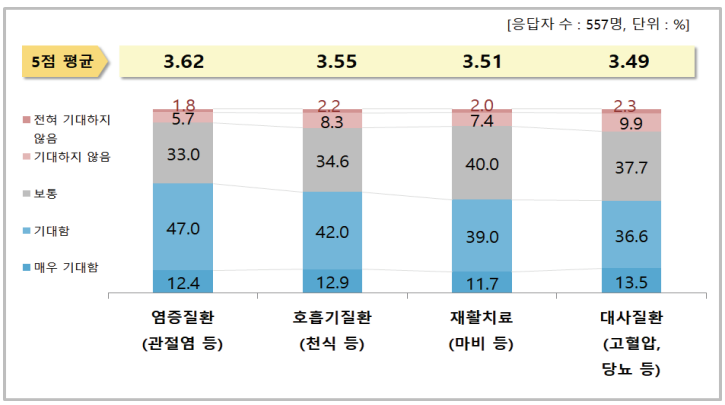
9)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신체건강증진'(4.03점), '피부질환'(3.88점), '정신건강증진'(3.86점), '노화방지·미용·다이어트'(3.74점), '체질개선'(3.72점)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염증질환'(3.62점), '호흡기질환'(3.55점), '재활치료'(3.51점), '대사질환'(3.49점)에 대한 치유효과를 기대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림 3-12〉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1)



〈그림 3-13〉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2)



연령별로는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는 신체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을 꼽았다. 30대는 신체건강증진 외에 피부질환·정신건강증진·노화방지 등을 기대했다. 40대는 30대에 비해 노화방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다. 50대는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기대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표 3-3〉 해양치유를 통해 기대하는 치유효과(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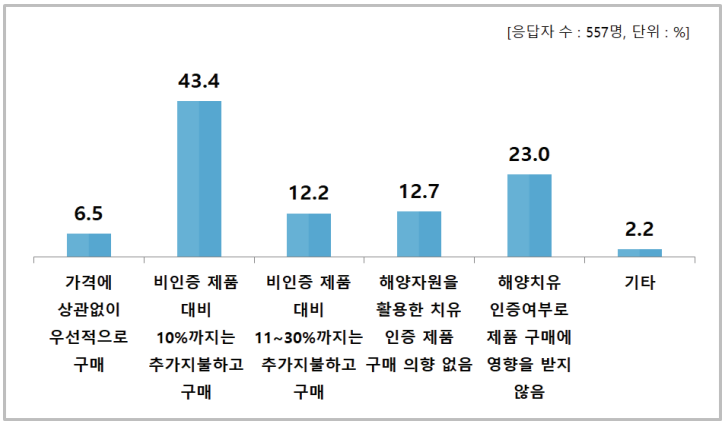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신체 건강 증진	피부 질환	정신 건강 증진	노화방지· 미용· 다이어트	체질 개선	염증 질환	호흡기 질환	재활 치료	대사 질환
전체	(557)	4.03	3.88	3.86	3.74	3.72	3.62	3.55	3.51	3.49
19~29세	(106)	**3.94**	3.51	**3.75**	3.60	3.33	3.22	3.15	3.16	2.92
30대	(139)	**3.95**	**3.86**	**3.79**	**3.82**	3.72	3.56	3.50	3.47	3.52
40대	(139)	**4.04**	**3.94**	**3.89**	3.73	**3.81**	3.71	3.67	3.64	3.63
50대	(108)	**4.21**	**4.15**	**4.06**	**3.90**	**3.94**	**3.94**	**3.82**	3.69	3.78
60대 이상	(65)	**3.97**	**3.98**	**3.80**	3.54	3.75	3.72	3.62	3.57	3.58

10) 해양자원 활용 치유인증 제품 구매 의향

해양치유 산업화를 고려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인증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구매 의향을 질문했다. '비인증 제품 대비 10%까지는 추가 지불하고 구매'(43.4%)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해양치유 인증여부로 제품 구매에 영향을 받지 않음'(23%)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해양자원 활용 치유인증 제품 구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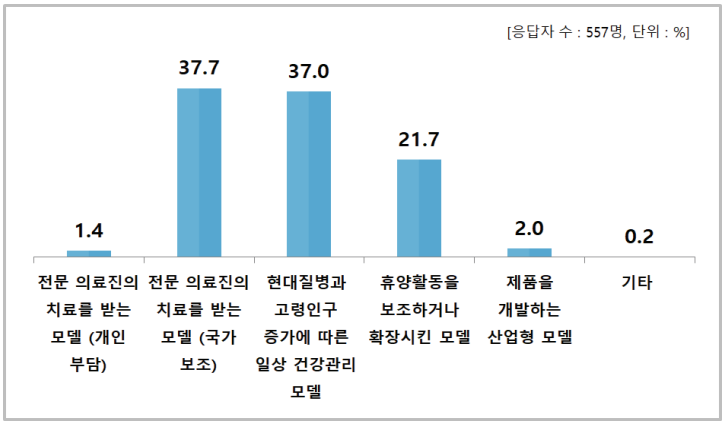


그 외 '비인증 제품 대비 11~30%까지는 추가지불하고 구매'(12.2%)한다는 응답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인증 제품 구매 의향이 없음'(12.7%)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 해양치유 도입 방식

국내에 해양치유가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모델(국가보조)'(37.7%), '현대질병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상 건강관리 모델'(37.0%)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양활동을 보조하거나 확장시킨 모델'(21.7%)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모델(개인부담)'(1.4%)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형 모델'(2.0%)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그림 3-15〉 해양치유 도입 방식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전문 의료진 치료를 받되 국가가 보조하는 모델을 선호했고, 50대 이상은 현대질병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상건강 관리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해양치유 도입방식(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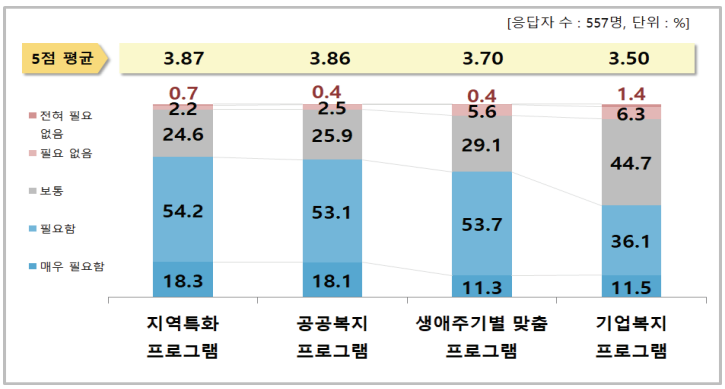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문 의료진 치료를 받는 모델 (개인 부담)	전문 의료진 치료를 받는 모델 (국가 보조)	현대 질병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상건강관리 모델	휴양 활동을 보조하거나 확장시킨 모델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형 모델
전체	(557)	1.4	37.7	37.0	21.7	2.0
19~29세	(106)	2.8	**46.2**	26.4	23.6	-
30대	(139)	0.7	**41.7**	31.7	23.0	2.9
40대	(139)	0.7	**37.4**	**34.5**	23.7	3.6
50대	(108)	1.9	32.4	**46.3**	18.5	0.9
60대 이상	(65)	1.5	24.6	**55.4**	16.9	1.5

12) 해양치유 도입 시 필요 프로그램

해양치유가 도입될 경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3.87점), '공공복지 프로그램'(3.86점),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3.7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복지 프로그램'(3.50점)은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6〉 해양치유 도입 시 필요 프로그램



연령별로는 대부분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40대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0대는 두 프로그램의 필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표 3-5〉 해양치유 도입 시 필요 프로그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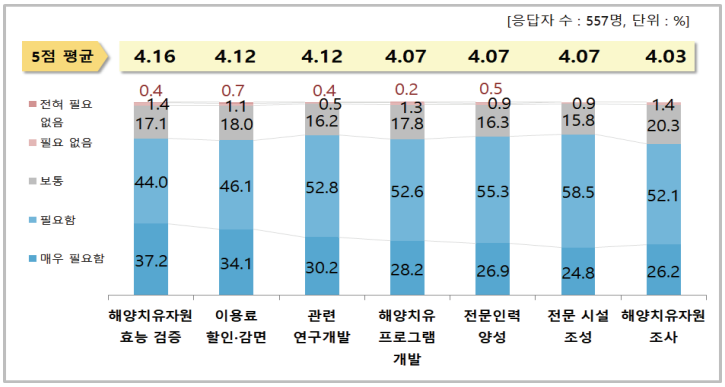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 수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공복지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기업복지 프로그램
전체	(557)	3.87	3.86	3.70	3.50
19~29세	(106)	**3.81**	3.70	3.44	3.35
30대	(139)	**3.83**	**3.81**	3.65	3.52
40대	(139)	**3.86**	**3.96**	3.73	3.57
50대	(108)	**3.95**	**3.94**	**3.91**	3.55
60대 이상	(65)	**3.95**	**3.88**	**3.80**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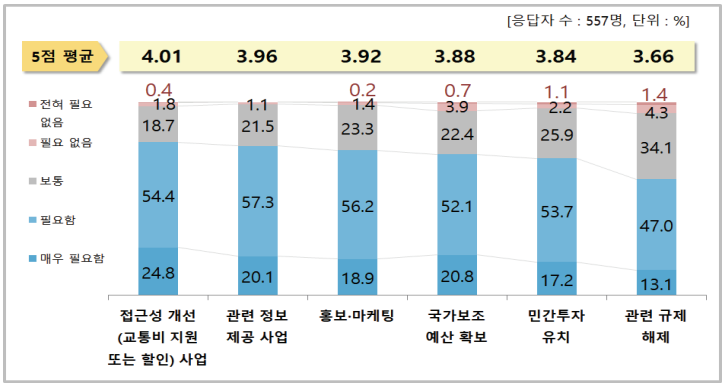
13)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

국내에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4.16점), '이용료 할인·감면'(4.12점), '관련 연구개발'(4.12점),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4.07점), '전문인력 양성'(4.07점), '전문 시설 조성'(4.0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치유자원 조사'(4.03점), '접근성 개선 사업'(4.01점), '관련 정보 제공 사업'(3.96점), '국가보조 예산 확보'(3.88점), '민간투자 유치'(3.84점), '관련 규제 해제'(3.66점) 등은 응답자들에게 그 필요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3-17〉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1)



〈그림 3-18〉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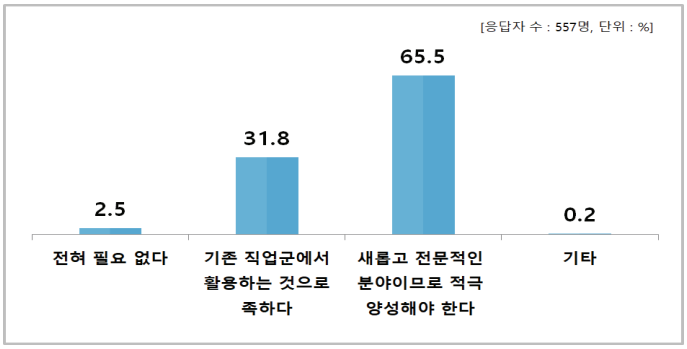


14)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전문 직업에 대한 의견

산림치유와 같이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에 대한 의견은 '새롭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적극 양성해야 한다'(65.5%), '기존 직업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족하다'(31.8%), '전혀 필요 없다'(2.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사 등의 전문 직업이 신설됨.

〈그림 3-19〉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전문 직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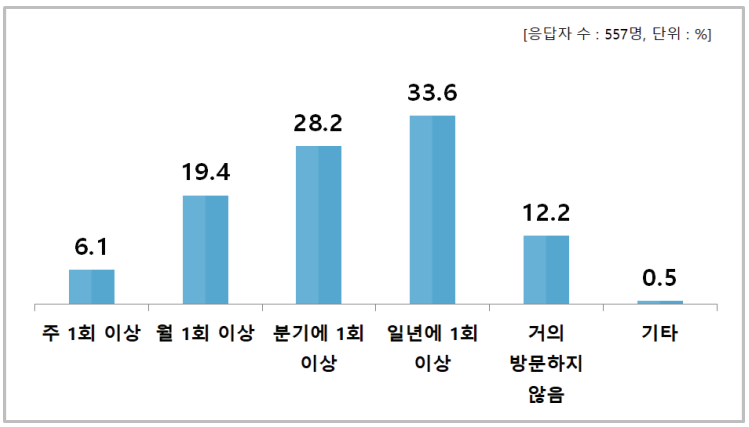


2.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관한 인식

1) 평소 바닷가 방문 빈도

평소 바닷가를 방문하는 빈도는 '일 년에 1회 이상'(33.6%), '분기에 1회 이상'(28.2%), '월 1회 이상'(19.4%), '거의 방문하지 않음)'(12.2%), '주 1회 이상'(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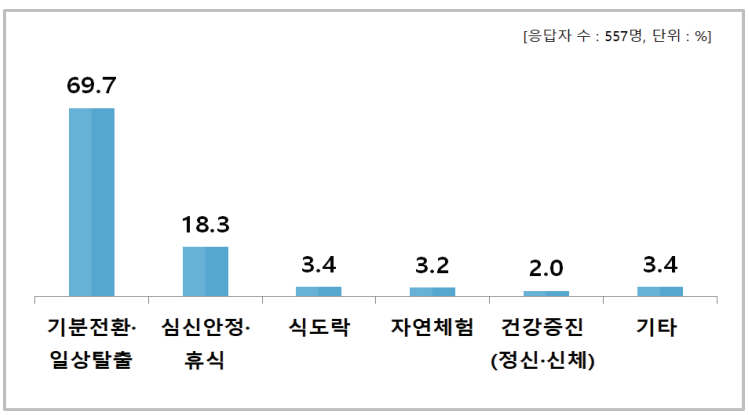
〈그림 3-20〉 평소 바닷가 방문 빈도



2) 바닷가 방문 이유

바닷가를 방문하는 이유는 '기분전환·일상탈출'(69.7%)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신안정·휴식'(18.3%)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식도락'(3.4%), '자연체험'(3.2%), '건강증진'(2.0%) 등의 이유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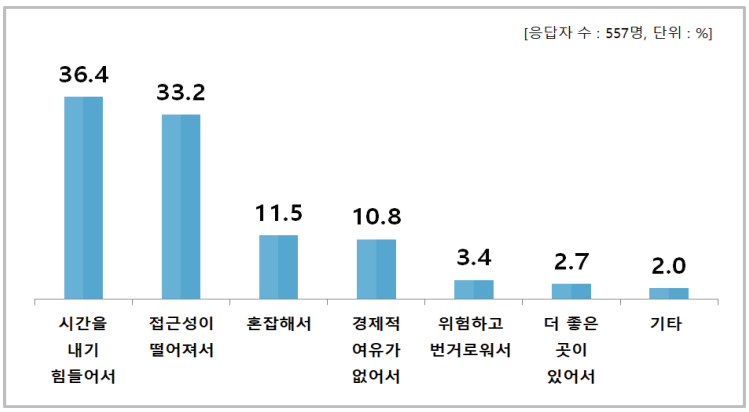
〈그림 3-21〉 바닷가 방문 이유



3) 바닷가 방문의 제약 요인

바닷가 방문의 제약 요인은 '시간을 내기 어려움(36.4%)', '접근성이 떨어짐(33.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잡해서'(11.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0.8%), '위험하고 번거로워서'(3.4%), '더 좋은 곳이 있어서'(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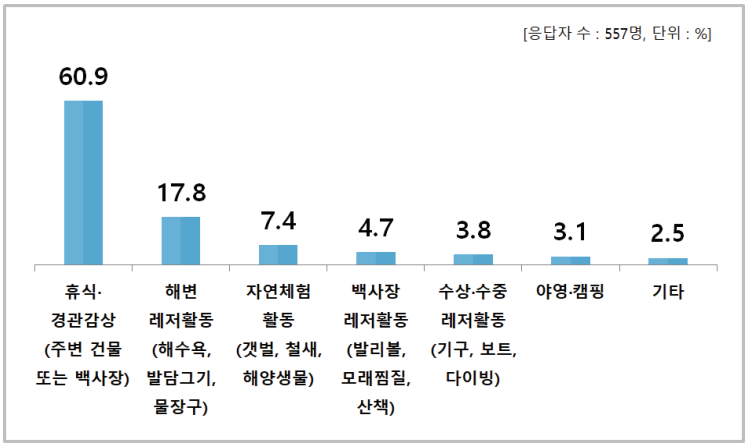
〈그림 3-22〉 바닷가 방문의 제약 요인



4) 바닷가 방문 시 참여하는 휴양 활동

바닷가 방문 시 참여하는 휴양 활동은 '휴식·경관감상'(60.9%)이 가장 높고 다음은 '해변 레저활동'(17.8%)으로 나타났다. '자연체험활동'(7.4%), '백사장 레저활동'(4.7%), '수상·수중 레저활동'(3.8%), '야영·캠핑'(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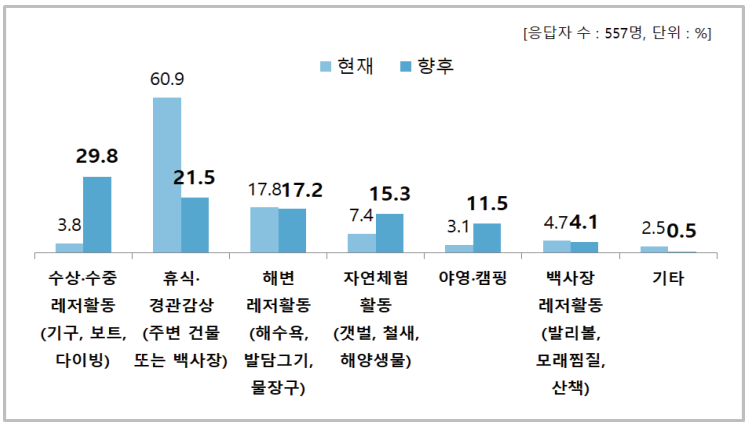
〈그림 3-23〉 바닷가 방문 시 참여하는 휴양 활동



5) 향후 희망 휴양 활동

향후 희망하는 휴양 활동은 '수상·수중 레저활동'(29.8%), '휴식·경관감상'(21.5%), '해변 레저활동'(17.2%), '자연체험 활동'(15.3%), '야영·캠핑'(11.5%), '백사장 레저활동(4.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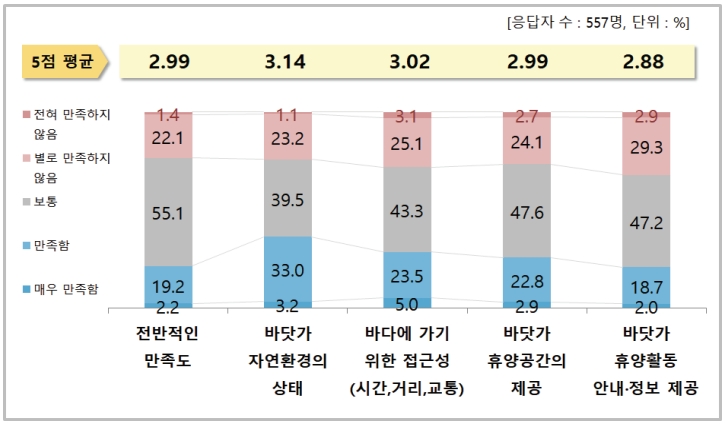
〈그림 3-24〉 향후 희망 휴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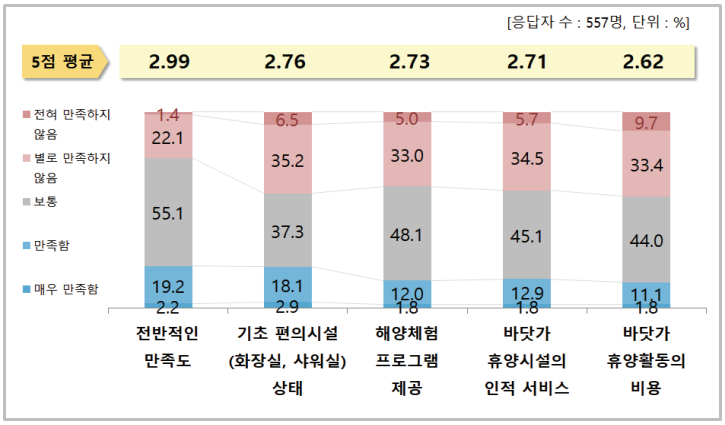
6) 바다 휴양활동 만족도

바다·바닷가를 이용하는 휴양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2.99점으로 나타났고 개별 활동도 3점 미만이 많은 편이다. 개별 활동은 '바닷가 자연환경의 상태'(3.14점), '바다에 가기 위한 접근성'(3.02점), '바닷가 휴양공간의 제공'(2.99점), '바닷가 휴양활동 안내·정보 제공'(2.88점) 등의 순이다.

〈그림 3-25〉 바다 휴양활동 만족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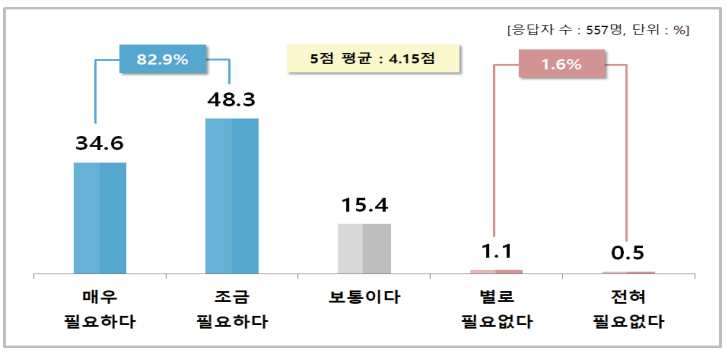
〈그림 3-26〉 바다 휴양활동 만족도(2)



7)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필요도

해양수산부가 바다 공간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양휴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2.9%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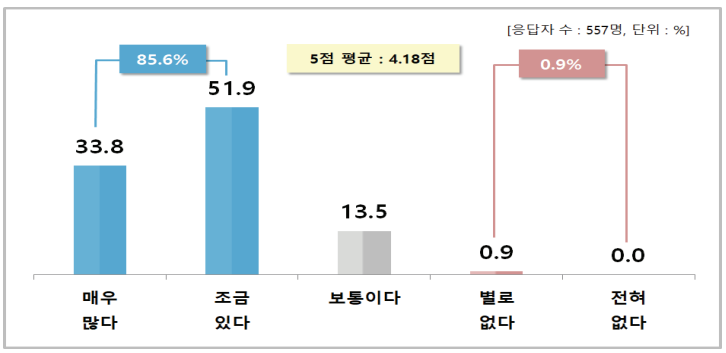
〈그림 3-27〉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필요도



8) 향후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이용 의향

향후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85.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필요도보다 더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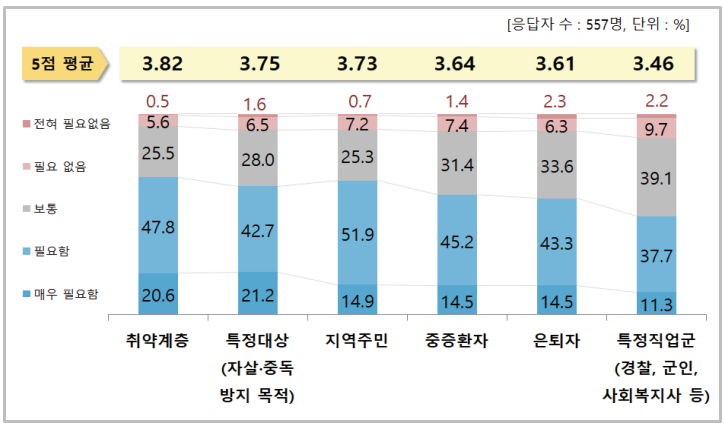
〈그림 3-28〉 향후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이용 의향



9)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필요 대상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필요 대상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취약계층'(3.82점), '특정대상(자살·중독 방지 목적)'(3.75점), '지역주민'(3.73점), '중증환자'(3.64점), '은퇴자(3.61점)', '특정직업군'(3.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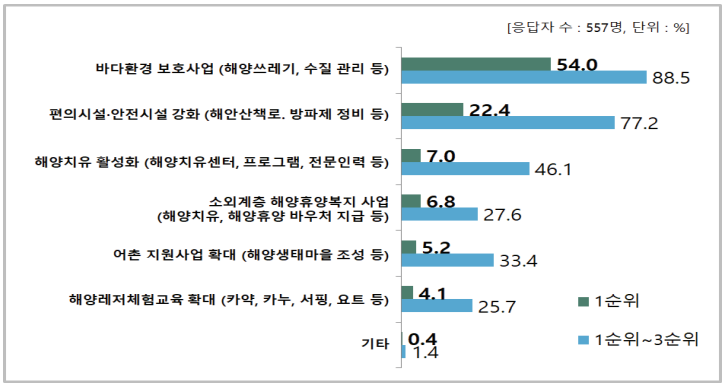
〈그림 3-29〉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필요 대상



10)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우선 시행 정책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바다환경 보호사업'(1순위, 54.0%), '편의시설· 안전시설 강화'(1순위, 2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양치유 활성화'(1순위, 7%), '소외계층 해양휴양·복지사업'(1순위, 6.8%), '어촌 지원사업 확대'(1순위, 5.2%), '해양레저 체험교육 확대'(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우선 시행 정책



제3절 시사점

1.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

미래에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휴양 공간 제공'과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원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 응답자들은 이 중 전자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닷가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기보다는 휴식·치유를 원하는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특정 해양자원의 효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바다 경관, 즉 바다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자원 및 해양의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양치유의 체험 의향 비율은 91.6%로 높은 편이며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는 물론 재미에 대한 기대가 많다.

응답자들은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

양치유 참여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바닷가 방문 시 직결되는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치유 효능이나 바다 경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구상하는 관련 인력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관광·오락 프로그램 연계 등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편이어서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정책수단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해양치유 도입 시 해양치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홍보하고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바닷가 방문 시 시간·비용상 접근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해양치유 공간에 있어서는 접근성에 비해 주변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치유자원으로서 해양경관과 해수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향후 정책 수립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들은 해양치유를 통해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증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웰니스'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응답자의 기대가 낮게 나타난 '질병치료' 영역은 프랑스·독일 등 해양치유를 의료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인증 제품을 개발할 경우 10% 수준의 추가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양치유 인증여부로 구매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구매 의향이 없

다는 응답도 많으므로 해양치유 인증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해양치유를 통한 질병치료, 건강관리, 휴양활동 방식을 선호하면서도 개인이 의료비용을 부담하거나 제품 개발 방식의 모델은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보조가 동반되는 일부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해양치유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치유 도입 시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공복지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해양치유 도입 시 필요한 사업에서 응답자들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수혜자로서 해양치유 서비스를 체험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이 문항이 시사하는 바는 수요자들이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검증과 이용료 할인·감면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해양치유 전문 직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 인력을 양성할 때 기존 직업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1년에 한 번은 바닷가를 방문하며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25% 이상이다. 응답자가 바닷가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일상적인 거주지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여행, 관광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치유'라는

개념 제시가 없더라도 이미 바다 공간이 '심신안정·휴식'과 같은 치유 공간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접근성' 문제는 다른 조사에서 나타나는 해양관광 제약요인과 일치한다. 이는 연안까지의 이동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바닷가를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거나 더 좋아하는 곳이 있는 경우는 선호의 문제이지만 '혼잡'이나 '비용'의 문제는 정책적인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닷가 방문 시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 역시 다른 해양관광 실태조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바닷가 방문 시 별다른 활동 없이 경관을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볍게 바닷물을 접하는 비율이 높다.

향후 수요는 수상·수중 레저활동과 자연체험활동, 야영·캠핑 등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바닷가 방문 시 활동 형태인 휴식·경관감상과 해변 레저활동은 수상·수중 레저활동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 방문 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인데 그나마 바닷가 자연환경의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면 바닷가 공간과 경관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들은 국민이 바다와 그 주변공간에서 휴양하는 권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해 82.9%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85.6%는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민 행복 증진과 관련해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우선

순위가 환경과 안전 분야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해양치유 활성화와 소외계층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을 높게 평가하여, 기존의 어촌 지원사업과 해양레저 체험 교육 외에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분야도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중독 방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정책 방향 설정 및 제언

제1절 기본방향

전 세계적으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휴양 및 웰니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양치유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휴양·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해 정부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실용화를 위한 R&D 사업(이하 '해양치유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해양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해양치유정책 동향 분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보면 해양을 통한 휴양·여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치유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적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 추세 및 산림 부문에서 시작된 산림복지서비

스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양 부문에서의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는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산업 도입을 중심으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국내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 도입의 타당성과 실용화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해양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해양치유와 이를 통한 국민 복지 증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 도입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도입은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공간 조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유도', '해양치유정책 추진 기반 정비'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해양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혁신을 통하여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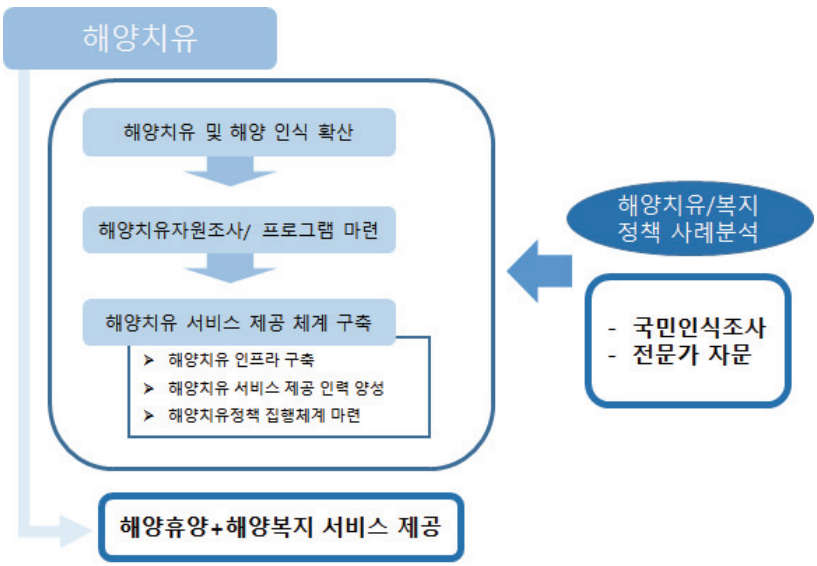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추진과제

1. 정책 과제의 설정

국내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과제는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산림 부문의 치유·복지정책 검토, 해외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양치유 R&D 사

업의 추진여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해양치유정책 과제의 설정 및 도출 과정은 〈그림 4-1〉과 같으며 본 정책 과제 도출의 최종 목표는 본 연구의 배경에서 제시한 것처럼 해양치유를 해양휴양·복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림 4-1〉 해양치유정책 과제 도출



자료: 저자 작성

2. 정책 추진과제

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인식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

와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체험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양치유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아 도입 초기 단계인 해양치유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선입견이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양치유·복지정책의 도입과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치유 및 이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식 확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방향에 대해 대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앞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정책 목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치유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의 목적을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질 개선 및 면역력 향상 등 건강 증진으로 설정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건강 유지 활동으로 해양치유의 영역을 정의하고 있다. 즉, 해양치유는 국민들이 해수, 소금, 갯벌, 해조류, 해풍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해소하고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 국민 누구나 해양치유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해양치유의 개념과 정책 영역, 정책 방향,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가 길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율적·효과적으로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유사 정책을 도입한 산림 부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식 개선 및 확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양치유정책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산림치유·산림복지 분야는 산림자원의 치유 효과에 대해 알리는 방송을 꾸준히 제작·방영해 왔으며, 효능 입증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산림치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체험 수기 공모를 통해 산림치유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산림치유에 대한 잠재 수요를 발굴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림자원을 통한 심신의 안정 및 치유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산림치유 이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해양치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통해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해양치유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양치유를 통한 심신의 안정 및 치유 효과, 건강 증진 사례 등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치유 R&D 사업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이들 자원의 치유 효능을 입증하는 한편, 치유 효능 연구 결과 자료를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치유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 연재를 추진하고,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과 바다 주간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해양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세미나, 학술대회 등 전문가와 정책 결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해양치유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을 제고하여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4-2〉 산림치유·복지정책 및 관련 서비스 홍보 사례

산림교육·치유체험수기 공모전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산림치유 다큐멘터리

자료: (좌)제5회 산림교육·치유 체험수기 공모사이트, (우상)IMBC, (우하)㈜피톤치드환경 네이버 블로그(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8. 27)

〈표 4-1〉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인식 제고

구분	사업 내용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 인식 확산	• 일반인 해양휴양·해양치유 체험 행사 개최 • 해양치유 체험 수기 공모전 개최
해양치유 홍보 사업	• 해양치유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기획 기사 작성 등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 해양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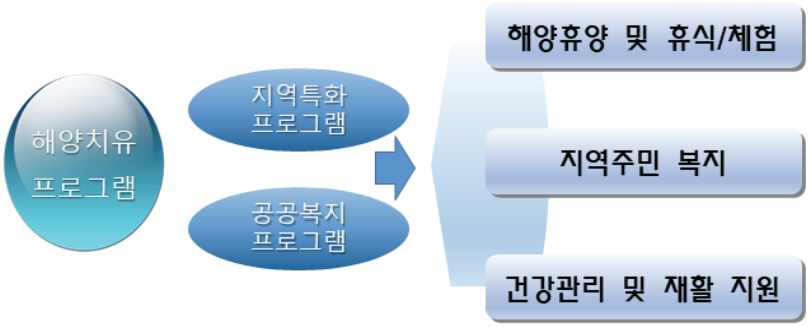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건강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검증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해양자원 중에서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해양치유 가능 자원을 조사하고 이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활용 가능한 DB 구축은 2017년부터 시행된 해양치유 R&D 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해양치유자원의 안정성과 치유효능을 규명하기 위한 임상검증 사업도 추진(2018년)되고 있으므로 연구를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치유자원 조사 성과를 국민들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앞서 해양치유 영역에 대한 설정 및 국민인식조사에서 제시했듯이 해양치유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수단이다. 따라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은 크게 2가지 측면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치유정책의 추진은 지역별 치유자원의 발굴·활용과 함께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해양휴양 및 휴식/체험형, 지역주민 복지형,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그림 4-3〉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공급 유형



자료: 저자 작성

각 지역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지역 고유의 치유자원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 이용자, 지역 주민, 건강관리/재활 목적 이용자 등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구별하여 상품을 개발하도록 한다.

〈표 4-2〉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프로그램 마련

구분	사업 내용
해양치유 자원 조사·발굴	• 해양치유자원 조사(전국 및 지역) 및 DB 구축 • 해양치유자원 안전성 및 활용 검증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 해양치유자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기반 해양치유 비즈니스 모델 발굴(관광 연계, 의료 연계, 은퇴/휴양 연계 등) • 해양치유 바우처 제도 도입

3) 해양휴양·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과 지역 주민에게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한편,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해양치유 R&D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으

며, 산림 부문에 비해 해양치유는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치유를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를 국민 휴양·복지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해양치유 홍보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단위 거점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해양치유정책 추진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4-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서비스 공급체계

자료: 저자 작성

해양치유정책 추진 및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자원 관리센터 및 지역단위 해양치유센터의 조성, 해양치유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해양치유만을 위한 특화된 인력을 양성·확보하는 것은 시장 수요 및 지역별 공급 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 수급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치유 및 복지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해양치유가 국민 휴양·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표 4-3〉 해양치유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구분	사업 내용
해양치유자원 기반시설 정비	• 해양치유자원 관리센터 조성/지정 • 지역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마을(체험마을. 은퇴자마을) 조성 • 해양치유 상품 판매
해양치유 교육 프로그램 보급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양성기관 지정 • 해양치유 창업 활성화 지원

3. 제도적 지원 방안의 마련

1) 해양치유 관련 법령 정비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해양치유자원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정책 영역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이나 관리, 해양휴양·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치유와 관련된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복지정책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는 산림 부문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해양치유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정책 도입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새로운 법령의 정비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림 4-5〉 「산림휴양법」과 「산림복지법」 도입 배경 분석

자료: 홍장원 외(2017), p. 84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법」의 도입 배경을 종합해 볼 때, 해양치유와 관련된 신규 법령의 마련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타당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법령의 세부 내용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치유 R&D 사업과 연계하여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4-4〉 해양치유법(가칭) 구성 및 주요 내용

해양치유법(가칭)의 주요 내용
• 해양치유법(가칭)의 목적, 정의, 타 법률과의 관계 •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지역계획의 수립,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정보 구축 • 해양치유 지구의 지정 및 치유 시설의 설치 • 해양치유자원의 개발 및 보급 방안

2) 부처 및 지역 간 협력체계 마련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복지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을 비롯하여 지역과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민관 협의체'를 조직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관광', 보건복지부의 '건강 및 복지사업', 산림청의 '산림치유' 정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발전시켜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이용, 관광상품 개발, 산림치유와의 연계 등 부처 간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치유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17년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의 4개 지자체를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양치유 R&D 사업을 통해 선정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양치유자

원 발굴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연안지역별 해양치유센터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여가시간 활용 및 휴양문화 트렌드의 변화와 웰니스 관광 시장의 성장으로 휴식과 힐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및 사회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정책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휴양 및 웰니스 시장 동향,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해양치유정책 도입 경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내 관련 정책으로는 산림치유 및 산림복지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해양치유를 보완대체요법으로 활용하거나 해양치유 시설을 지역 주민의 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국내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치유를 산림복지 정책의 구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서비스 정책은 비교적 최근 들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2017년 해양치유 R&D 사업 추진으로 본격화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중

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해양치유정책이 도입 초기에 있으므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하여 해양치유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다.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2.9%가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의사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 건강증진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양치유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와 더불어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해양치유정책은 지역주민의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양치유 R&D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치유정책의 추진은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공간 조성,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해양치유 정책 추진 기반 정비 등 3개 분야로 정책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우선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해양치유에 대한 범국민적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양치유에 대한 수요 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연안에 산재해 있는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해양치유를 위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적 제언

효과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해양치유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치유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결과, 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해양치유를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양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치유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해양치유자원 발굴,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등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4-5〉 해양치유정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안

구분	방안	추진주체			비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해양치유 및 해양휴양·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	• 해양치유 인식 확산 – 일반인 해양복지·해양치유 체험 행사 개최 – 해양치유 체험 수기 공모전 개최	◎	◎		–
	• 해양치유 홍보 사업 – 해양치유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기획 기사 작성 등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 – 해양치유 관련 정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	◎		민간 협회/학회 지원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마련	• 해양치유자원 조사/발굴 – 해양치유자원 조사(전국 및 지역) 및 DB 구축 – 해양치유자원 안전성 및 활용 검증	◎	◎		–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 해양치유자원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기반 해양치유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관광 연계, 의료 연계, 은퇴/휴양 연계 등	◎	◎		–

구분	방안	추진주체			비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 해양치유 바우처 제도 도입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해양치유자원 기반 시설 정비 – 해양치유자원 관리센터 조성/지정 – 지역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마을 조성 – 해양치유 상품 판매	◎	◎	◎	민간 사업자 지원
	• 해양치유 교육 프로그램 보급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양성기관 지정 – 해양치유 창업 활성화 지원	◎		◎	민간 협회/학회 지원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해양치유 관련 법령 정비	◎			부처 간/지역 간 협력
	• 부처 및 지역 간 협력체제 마련	◎	◎		부처 간/지역 간 협력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4. 12.

농촌진흥청, 「2017년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보고서」, 2018. 3.

문화체육관광부,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8. 5.

_____,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모델 개발 연구」, 2014. 2.

_____, 보도자료,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2017. 5. 24.

_____, 보도자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지역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2018. 5. 8.

박세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7호, 2016. 7.

박영은, 「딸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의 이론적 고찰」,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2007.

산림청,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3. 7.

_____, 「산림복지 진흥계획(2018~2022)」, 2017. 12.

유리화 외, 「자연치유 관련 동향 및 산림치유 시사점」, 『KFRI 산림정책이슈』, 제33호, 국립산림과학원, 2014.

윤인주 외, 「해양치유시설의 국내 도입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항해항만학회 발표자료, 2017.

이정희 외, 「산림치유 동향과 발전 방안」, 『KFRI 산림정책이슈』, 제8호, 국립산림과학원, 2013.

최성애 외, 『고령화시대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최일선·이정아, 「국내 해양치유관광 현황과 발전 전망」,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웰니스 관광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이끈다」, 2018. 7.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2012.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제55호, 2017. 11.

_____, 「KMI 동향분석」, 제80호, 2018. 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양치유산업 본격 추진한다」, 2017. 10. 17.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내부 자료.

홍장원 외,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외 문헌〉

독일해양치유협의회(Deutscher Heilbäderverband e.V.), "Jahresbericht 2017", 2017.

_____, 내부 자료, 「해양치유 관리규정집」.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17. 1.

Getenbrunner, C. & T. Bender, "A proposal for a worldwide definition of health resort medicine, balneology, medical hydrology and climatology", *International Journal Biometeorol*, 54(5), 2010.

Thalgo Laguna 브로슈어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검색일: 2018. 8. 23).

독일해양치유협의회, http://www.deutscher-heilbaederverband.de/die-kur/ihr-kurort/(검색일: 2018. 8. 24).

독일 북해섬 안내, http://www.nordseeinseln-infos.de/badehaus-norderney-europas-groesstes-thalassozentrum/; https://www.berliner-zeitung.de/ratgeber/reise/seebad-luftkurort-womit-gemeinden-werben-duerfen-1457202(검색일: 2018. 8. 24).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View?gid=67769237&date=20141110,(검색일: 2018. 8. 21).

두산백과, www.doopedia.co.kr(검색일: 2018. 8. 24).

베를린 신문, www.berliner-zeitung.de(검색일: 2018. 8. 2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 06360101&PAGE=1&topTitle=(검색일: 2018. 8. 21).

비짓제주, www.visitjeju.net/kr(검색일: 2018. 8. 22).

생명의숲, forest.or.kr(검색일: 2018. 8. 22).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80821152518867(검색일: 2018. 8. 25).

정부 24, www.gov.kr(검색일: 2018. 8. 27).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128(검색일: 2018. 8. 25).

제5회 산림교육·치유 체험수기 공모사이트, https://forestwelfare.com/w_notice/325, (중)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77490(검색일: 2018. 8. 27).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0112.html(검색일: 2018. 8. 25).

진안 홍삼스파, www.redginsengspa.co.kr(검색일: 2018. 8. 22).

칸나탈라소라구나, http://www.kanassa.jp/barde/index.html(검색일: 2018. 8. 25).

탈라주르 센터, www.thalazur.fr(검색일: 2018. 8. 2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검색일: 2018. 8. 24).

프랑스 탈라소, www.france-thalasso.com/centres(검색일: 2018. 8. 20).

프랑스 투데이, https://www.francetoday.com/spa/history-benefits-french-thalassotherapy-break/(검색일: 2018. 8. 13).

해양수산부, www.mof.go.kr(검색일: 2018. 8. 24).

IMBC,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198023(검색일 : 2018. 8. 27).

㈜피톤치드환경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000404&logNo=220122917752&categoryNo=34&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검색일: 2018. 8. 27).

부록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D | | | | |

해양치유 · 휴양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8070101-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공간과 그 속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8.

설문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 부연구위원 (061-797-4724)
조사문의 사항	㈜한국리서치 이예진 연구원 (02-3014-1095)

SQ11	거주지 (광역시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12	거주지 (시군구)	( ) 시군구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연령은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면접종단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PART A. 해양휴양복지에 관한 인식

Q1. 귀하는 평소에 바닷가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① 주1회 이상 ② 월1회 이상 ③ 분기에 1회 이상
④ 일년에 1회 이상 ⑤ 거의 방문하지 않음 ⑥ 기타:_____

Q2. 귀하가 바닷가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증진(정신·신체) ② 심신안정·휴식 ③ 기분전환·일상탈출
④ 자연체험 ⑤ 식도락 ⑥ 기타:_____

Q3. 귀하가 평소에 바닷가에 자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접근성이 떨어져서 ②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③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위험하고 번거로워서 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⑥ 혼잡해서
⑦ 기타:_____

Q4. 귀하가 바닷가를 방문해서 주로 참여하는 휴양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휴식·경관감상(주변 건물 또는 백사장에서) ② 해변레저활동(해수욕, 발담그기, 물장구)
③ 백사장레저활동(발리볼, 모래찜질, 산책) ④ 수상·수중레저활동(기구, 보트, 다이빙)
⑤ 자연체험활동(갯벌, 철새, 해양생물) ⑥ 야영·캠핑
⑦ 기타:_____

Q5. 귀하가 향후에 바닷가를 방문해서 참여하고 싶은 휴양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휴식·경관감상(주변 건물 또는 백사장에서) ② 해변레저활동(해수욕, 발담그기, 물장구)
③ 백사장레저활동(발리볼, 모래찜질, 산책) ④ 수상·수중레저활동(기구, 보트, 다이빙)
⑤ 자연체험활동(갯벌, 철새, 해양생물) ⑥ 야영·캠핑
⑦ 기타:_____

Q6. 귀하가 바다·바닷가를 이용하는 휴양활동과 관련한 만족도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바다에 가기 위한 접근성 (시간, 거리, 교통)	①	②	③	④	⑤
(3)	바닷가 자연환경의 상태	①	②	③	④	⑤
(4)	바닷가 휴양공간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바닷가 휴양활동 안내·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해양체험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7)	기초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의 상태	①	②	③	④	⑤
(8)	바닷가 휴양활동의 비용	①	②	③	④	⑤
(9)	바닷가 휴양시설의 인적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Q7. 귀하는 해양수산부가 바다 공간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휴양복지란 바다를 활용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말하며, 국민 누구나 바다와 그 주변 공간에서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할 수 있는 휴양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혀 필요없다 ② 별로 필요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Q8. 귀하는 향후 해양수산부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많다

Q9. 귀하는 다음 대상에게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o.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취약계층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주민	①	②	③	④	⑤
(3)	특정직업군(경찰, 군인, 사회복지사 등)	①	②	③	④	⑤
(4)	특정대상(자살·중독 방지 목적)	①	②	③	④	⑤
(5)	중증환자	①	②	③	④	⑤
(6)	은퇴자	①	②	③	④	⑤

Q10. 귀하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① 바다환경 보호사업 (해양쓰레기, 수질 관리 등)
② 편의시설·안전시설 강화 (해안산책로, 방파제 정비 등)
③ 해양치유 활성화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④ 해양레저체험교육 확대 (카약, 카누, 서핑, 요트 등)
⑤ 어촌 지원사업 확대 (해양생태마을 조성 등)
⑥ 소외계층 해양휴양복지 사업 (해양치유, 해양휴양 바우처 지급 등)
⑦ 기타:_____

PART B. 해양치유에 관한 인식

Q11. 귀하는 앞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주목받을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산물 생산 ② 항로 이용 ③ 휴양·여가 공간 제공
④ 해양자원 활용(심층수, 석유 가스 등) ⑤ 해양생물자원 활용
⑥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⑦ 기타:_____

Q12. 다음은 바닷가 방문에 대한 여러 전망입니다.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바다를 찾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바닷가 지역의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힐링바람을 타고 바닷가에 치유여행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Q13. 귀하는 향후 국내에 해양치유가 도입된다면 체험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양치유란 해수, 머드, 소금, 해조류 등 해양자원 및 해양의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여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① 있다 ② 없다 ☞ Q13-1번으로 이동

Q13-1. 귀하가 해양치유를 경험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
②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
③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을 것 같기 때문
④ 바다(및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⑤ 기타:_____

* 응답 후 Q15로 이동

Q14. 귀하가 해양치유를 경험해보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새로운 방식의 치유활동에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②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심리적 기대
③ 바다 공간에서의 신체적 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증진 기대
④ 해양생물자원의 유익한 효능을 활용한 건강증진 기대
⑤ 기존의 해양휴양 활동 효과를 더 높인다는 기대
⑥ 재미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기대
⑦ 기타:_____

Q15. 귀하는 해양치유에 참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시겠습니까?

구분	전혀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매우 고려함
(1) 우수한 바다 경관	① --- ② --- ③ --- ④ --- ⑤				
(2) 바다 및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	① --- ② --- ③ --- ④ --- ⑤				
(3) 쾌적한 공간과 시설	① --- ② --- ③ --- ④ --- ⑤				
(4) 편의시설(식당·숙박)	① --- ② --- ③ --- ④ --- ⑤				
(5)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 ⑤				
(6) 전문 인력의 서비스	① --- ② --- ③ --- ④ --- ⑤				
(7) 접근성(거리·교통편)	① --- ② --- ③ --- ④ --- ⑤				
(8) 이용료	① --- ② --- ③ --- ④ --- ⑤				
(9) 검증된 치유(치료) 효능	① --- ② --- ③ --- ④ --- ⑤				
(10) 해양치유자원의 안전성	① --- ② --- ③ --- ④ --- ⑤				
(11) 관광·오락 프로그램과의 연계	① --- ② --- ③ --- ④ --- ⑤				

Q16. 귀하는 해양치유 공간이 조성된다면 다음 중 어느 곳에 방문하시겠습니까?

① 접근성이 탁월한 (대)도시 인근 바닷가
②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중소도시 인근 바닷가
③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깨끗하고 한적한 바닷가
④ 기타:_____

Q17.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해양치유자원의 효능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음	기대하지 않음	보통	기대함	매우 기대함
(1) 해수	① --- ② --- ③ --- ④ --- ⑤				
(2) 해사(모래)	① --- ② --- ③ --- ④ --- ⑤				
(3) 해풍(바람)	① --- ② --- ③ --- ④ --- ⑤				
(4) 해염(소금)	① --- ② --- ③ --- ④ --- ⑤				
(5) 해조(해초)	① --- ② --- ③ --- ④ --- ⑤				
(6) 해니(머드)	① --- ② --- ③ --- ④ --- ⑤				
(7) 해경(경관)	① --- ② --- ③ --- ④ --- ⑤				
(8) 일광(햇빛)	① --- ② --- ③ --- ④ --- ⑤				
(9) (해양)기후	① --- ② --- ③ --- ④ --- ⑤				

Q18. 귀하는 해양치유를 통해 어떤 치유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음	기대하지 않음	보통	기대함	매우 기대함
(1) 염증질환(관절염 등)	① --- ② --- ③ --- ④ --- ⑤				
(2) 피부질환(아토피 등)	① --- ② --- ③ --- ④ --- ⑤				
(3)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등)	① --- ② --- ③ --- ④ --- ⑤				
(4) 호흡기질환(천식 등)	① --- ② --- ③ --- ④ --- ⑤				
(5) 재활치료(마비 등)	① --- ② --- ③ --- ④ --- ⑤				
(6) 체질개선(알러지 등)	① --- ② --- ③ --- ④ --- ⑤				
(7) 노화방지·미용·다이어트	① --- ② --- ③ --- ④ --- ⑤				
(8) 신체건강증진(면역력향상,해독,긴장·스트레스완화)	① --- ② --- ③ --- ④ --- ⑤				
(9) 정신건강증진(자아성찰,사회적 관계 향상)	① --- ② --- ③ --- ④ --- ⑤				

Q19. 귀하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인증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가격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구매
② 비인증 제품 대비 10%까지는 추가지불하고 구매
③ 비인증 제품 대비 11~30%%까지는 추가지불하고 구매
④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 인증 제품을 구매할 의향 없음
⑤ 해양치유 인증여부로 제품 구매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⑥ 기타:_____

Q20. 귀하는 국내에 해양치유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모델 (개인 부담)
②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모델 (국가 보조)
③ 현대질병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일상 건강관리 모델
④ 휴양활동을 보조하거나 확장시킨 모델
⑤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형 모델
⑥ 기타:_____

Q21. 귀하는 국내에 해양치유가 도입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o.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2)	지역특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3)	공공복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4)	기업복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Q22. 귀하께서는 국내 해양치유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국가보조 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민간투자 유치	①	②	③	④	⑤
(3)	관련 규제 해제	①	②	③	④	⑤
(4)	전문 시설 조성	①	②	③	④	⑤
(5)	접근성 개선(교통비 지원 또는 할인) 사업	①	②	③	④	⑤
(6)	관련 정보 제공 사업	①	②	③	④	⑤
(7)	홍보·마케팅	①	②	③	④	⑤
(8)	전문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9)	관련 연구개발	①	②	③	④	⑤
(10)	이용료 할인·감면	①	②	③	④	⑤
(11)	해양치유자원 조사	①	②	③	④	⑤
(12)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①	②	③	④	⑤
(13)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Q23. 귀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사 등의 전문직업이 신설됨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기존 직업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새롭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적극 양성해야 한다
④ 기타:_____

PART C.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귀댁 가족 분들 모두의 보너스와 이자를 포함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299만원 ③ 300만원-399만원
④ 400만원-499만원 ⑤ 500만원-699만원 ⑥ 700만원 이상 ⑦ 무응답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경영/관리/전문/자유직 ② 사무관련직/기술직 ③ 자영업
④ 서비스/판매/영업직 ⑤ 농/임/수산업 ⑥ 생산/단순노무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직접 기재 : _____) ⑪ 무응답

DQ3.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DQ4.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 )명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헌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회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언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內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회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루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언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헌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회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회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언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회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9 브릿지」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인　　쇄 ▌2019년 4월 28일 인쇄
발　　행 ▌2019년 4월 30일 발행
발 행 인 ▌양 창 호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주)디자인월드 051-916-1533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